



월간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회세경영저널

무

eAnSe.com

30분내 Q&A답글 + 즉답829-7575
010-2672-2250

Biz life partner, 온라인재경교육, e러닝, 전직원경영관리아카데미, CEO, CFO, CMO 등 경영진 휴대북, 관리자 점검표 · 실무자학습지

이달의 특집

- 2022 세금절약 가이드 (국세청)

[주요정보]

- '2022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 발간 (기획재정부)
- 7월 1일부터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 5개 직종 노무제공자 및 자영업자 대상 고용보험 적용 확대 시행 (고용노동부)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 (AnSe consulting)
 ← 경영관리 · 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터 →

등록번호 영등포로-0129 · 등록일 2003년 11월 11일 발행인겸편집인 : 이윤선
 발행처 (주)안건조세정보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84길 41(신길동) 안세빌딩 1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안건조세정보



안사회계법인

Anse, the Best Answer

829-7557

829-7555

anse.com

..... ESG컨설팅과 인증,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설계자문, 기업가치평가

- PA 전문 ① 상장, 코스닥, 대기업의 내부회계 Private Accounting 전문 특화
- 회계감사 ② 소속회계사 115명 + 세무직원 286명 = 성실한 401명 활동
- 세무대리 ③ 대형회계법인에서 10년 이상 경력의 숙련된 전공별 회계사
- 재무자문 ④ 2020년 매출액 535억원으로 196개 법인 중 10번째 규모
- 경영컨설팅 ⑤ 서울 핵심지역과 광역시 총 21개의 현지밀착 1시간내 사무소
- 회계기장 ⑥ 모두 업무기획·계약·현장실행·품질관리 전 공정 책임수행
- 창업지원 ⑦ 獨自創安(독립, 자율, 창업, 안전) 경영이념과 적법투명회계
- 가업승계 ⑧ 고객현장근무 중심, 사전문제예방 컨설팅 파견과 재택가능

담당회계사·재경컨설턴트: 경리·재경아웃소싱 업무를 수행할
안세의 전국 사업본부의 소속 공인회계사등과 분사무소 · 지점

자매 회사 안건조세정보 (02-829-7575)

서울본사 (영등포)	829-7557 외부감사·세무대리·회계·기장·재무·ESG컨설팅·기업가치평가(IFRS 적용컨설팅)·내부회계관리제도설계·금융자문·품질관리심리실·준법감시인·재경본부운영·전문지식정보운영팀 박윤중·김형석·고주현·이동건·안수현·장용석 등 70명 등기이사파트너 / 심리실: 손세정(준법감시인 겸 심리역)		
	고두환·고영일·공희성·김경수·김봉수·김수범·김영근·김옥철·김윤전·김종창·김준영·김준일·김형석·나경수·박규태·박기훈·박병준·배익권·송형근·안수환·윤훈기·이만선·이미지·이샤야·이승환·이원재·이형주·정상문·조민기·조성민·조영우·진경일·진수미·표정형·최우영·한상표·한용주·홍종혁·허진영(변호사: 준법지원역)		
서초강남본부	070-7668-6865	강민우·곽영미·김태현·이현섭·배문호·송태현·최민욱·신민석·조세용·황준호·정호신·김동현	
강남금융본부	070-5101-1651	우성권·김용환·김수범·홍희빈·이혜리·강윙희·김현단·선지우·박경혜·이원구	
동작남부본실	02-6011-5514	이남재·정현·허근·황창연·장욱	강남지점 516-4199 윤봉진·장원택·김현민 + 3인
부산강남본부	051-322-8321	공병진·이동계·윤재훈 + 10인	서초지점 6245-7502 정 훈·김태경·라선희 + 10인
대전충청본부	042-525-5558	이상훈·김형진·정대환 + 10인	논현지점 571-3700 정원웅·임진호·안영호 + 4인
광주호남본부	062-714-3303	양철성·김희표·김민주·김창훈·최재용	삼성동지점 02-312-2254 안수현·조성민·유진우
부산지점	051-819-3308	박지훈·이성태·양승민 + 5인	여의도지점 6959-2378 고주현·양용석·황창연 + 5인
부산중앙지점	051-714-7227	이형래·홍영표·김치현 + 7인	센트럴지점 2209-0710 유환철·유지윤·윤현철 + 4인
부산센텀지점	051-938-9677	이수영·고경호·이대건 + 2인	영등포지점 2633-9243 차병길·원영민·강병훈 + 10인
경인지점	032-815-2641	심강수·이희곤·정영훈 + 4인	가산지점 2026-8838 조재형·이동건·고경환 + 3인
일산지점	031-817-4189	김종운·송주호·최민욱 + 2인	중소기업지원센터 312-2255 이익재·이준상·이승호
특별자문역	유찬영 세무사, 홍현영 법무사, 이승환 노무사, 김재득 세무사, 김흥기·윤경만·박희원·이우목·이미경 경영지도사		

안사회계법인의 상장·대기업 PA(Private accounting) 업무 상세내역

안사회계법인은 거래소상장법인 코스닥상장회사 재벌집단 대기업그룹 다국적글로벌외투법인등의 내부회계협력자문 PA(Private accounting)회계재무경영자문 아웃소싱용역의 최선봉에서,기업내부재경실무자의 애로점을 최적해결하는 경력자중심 조직임 - 빅4등에서 7년차이상의 베테랑회계사가 소속되어 창업적 활동함.(02-829-7575)

- ESG컨설팅·인증 상장회사 등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작성, 자문, 인증업무, 환경, 사회, 투명경영전략 설계 컨설팅
- 가치평가 기업전체가치평가(DCF 등), 기업 1주당 주식가치평가, 전환사채의 주식 및 옵션 가치평가, 상환우선주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옵션가치평가, 사모ABL평가, 보유투자주식평가, 이항모형 스톡옵션평가, 고정자산손상평가, 지분증권평가, 영업권 등 무형자산평가, 주식손상평가(관계사, 종속회사), PBR·PER 이용한 주식가치평가, 타회계감사제출용 매도가능증권평가, 투자기업의 분기별 공정가치평가, 해외자회사 주식평가, 타회사 인수를 위한 기업가치평가, 무담보채권평가, 비상장주식의 상증법상 평가, 특수관계인간 주식양수도평가, RCPS용 비상장주식평가, 비상장사의 영업권 평가, 무형자산손상검토, 사회적 가치서비스 창출자문(ESG)
- 일반재무제표 매년도 재무제표 작성·지원용역, 현금흐름표와 주석작성, 내부경리실무자의 일손부족분 결산보조,원가회계와 제조원가계산. 제품 반제품 재공품 원재료 명세서작성,원가관리와 제품별 공정별 원가계산과정의 엑셀정리집계,제조원가배부용 감가상각비계산과 생산원가반영후 최종결산재무제표작성, 반기재무제표작성, 기업인수합병영업권대가의 각 사업부 배부용역, 재무결산지원, 재무제표작성과정의 신속·고도화, 건설·조선 공사 등 진행을 검토, 분기·반기·연차 재무제표작성지원협력, 국가중앙행정 각부·지자체 등 결산지원업무, 공기업·공기관 결산지원용역
- 내부회계분야 내부회계시스템 구축·설계,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구축 및 운영평가지원, 재무관리실태감사와 내부회계지원
- K-IFRS 관련 국제회계자문 연간일정(평상시 회계쟁점자문, 질문의견서 작성, 분기재무·반기검토 작성지원, 결산마감과 재무제표·현금흐름표·주석 작성, 연결분개재무제표, 외감현장입회대응, 해외모기업 합산재무지원)
- 외감 아닌 기타 인증업무 합의된 절차에 의한 실사업무, 사업비정산 검토감사, 임의감사, 조성원가추정계산, 연구비 위탁정산
- 연결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작성·지원·자문용역, 국내외 자회사 등의 내부거래이익 제거, 연결재무제표 기초이월잔액 검증
- 사업계획서 등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타당성보고서, 사업계획 미래 현금흐름검토, 대규모 사업단지 개발지역·오피스텔 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스타트업 지원
- M&A 실사·조사 등 인수대상회사 실사, 내부 임직원 부정적발조사, 자산부채자본실사, 자산양수도거래의 외부평가
- 화의·법정관리 등 각급 법원 회생조사위원, 회생신청 전반 컨설팅, 관리인 조사보고서의 재검토
- 외국·해외비지니스 감사보고서 영문번역, 해외투자과 자원개발 자금 심사와 실사업무, USGAAP기준, 영문감사보고서
- 기타 특수업무 기업의 금융감독원 특별심사 감리대응자문, 위탁수수료 예상가격 산정, 컨설팅사의 공기관 제출 인증서류 검토, 사외이사취임, 내부감사(상근, 비상근), 상장사 등 내부 감사위원회 구성원 역할





월간 세무회계경영저널

+ 교육 · 훈련강의저널
+ CEO · CFO · 기업법무저널

www.eAnSe.com

월간 세무회계경영저널은
고객회사와 기업재경실무자의
“명료한 세무판단”,
“투명한 회계처리”,
“효율적 경영활동”
에 도움을 드리고자,
여러 회계법인이 연합하여
공동제작하는
회계세무재경 전문가의
정보자료전략컨설팅지
입니다.

이달의 회계조세전략 핵심 point

- 소득세 · 법인세 및 관련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무 등 2
- 창업시 직원 명의 차명주식을 명의 환원하려면 어떤 방법이 유리할까? 3
- 자산취득금액의 일부를 국고보조금으로 받은 경우의 회계 · 세무처리 5

이달의 특집

- 2022 세금절약 가이드 (국세청) 9

6월의 세무일지

일 자	구	분
11(월)	법인·소득세(농특세 포함) 원천징수분 납부, 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 레저세(지방교육세·농특세 포함) 신고납부,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납부, 증권등거래세 신고납부	
20(수)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25(월)	부가가치세 제1기분 확정신고납부, 개별소비세 2분기 신고납부	확

세무정보

- 「2022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기획재정부) ... 113

노무정보

- 7월 1일부터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 5개 직종 노무제공자 및 자영업자 대상 고용보험 적용 확대 시행 (고용노동부) 140

- 부가세영세율과표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액 평가의 기준 · 재정 환율 (6월) 144

민감한 회계조세전략

핵심 point 안세재경저널

◎ 소득세 · 법인세 및 관련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무 등

- 안세재경저널 2022/6/8일자 통권 1574호(표지)

개념, 구분	소득세법	법인세법	지방소득세법
신고납부규정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제3항	지방세법 제95조 제1항, 제2항
규정내용요약	종합소득 있는 거주자(과세표준 없거나 결손금 있는 거주자 포함)	법인은 법인세를 신고하며, 각 연도 소득이 없거나 결손법인도 적용한다.	거주자(개인·법인)은 소득법인세 신고하며,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인 경우도 신고해야 한다
신고서 제출	종합소득세 신고서	법인세 신고서	국세에 부수되는 지방세신고서
세액계산납부	과세표준 단계별 누진세율 (6%~45%)	과세표준×10%, 20% 등	소득·법인 과세소득에 누진세율 적용
과세미달, 0인 경우의 신고	종합소득자(소득이 없거나 결손금 있는 거주자 포함) 신고함	사업연도 소득 없거나 결손이어도 신고해야 함	과세미달 음수 0인 경우도 신고가 원칙임
가산세 부과방법	부정신고 등은 매출의 0.14%	법인세 산출세액 없어도, 매출수입금액의 0.07%(부정신고는 0.14%)	소득세액이 없으면 가산세는 없음
무신고가산세	납부할 세액×20%, 부정행위는 40%	납부할 세액×20%, 과소신고는 10%	무신고는 20%, 과소신고는 10%
결손0이어도 신고서는 제출하는 이유	과세당국에게 납세자의 상태 알림 (+인지, 0인지, -인지, 계속사업인지의 표방)		과세관청 입장에서 +, 0, -인지, 폐업인지 알 수 없어, 신고행동이 필수임

● 개인사업자의 업종별 매출규모별 복식부기와 추계신고 유형 비교

- 안세재경저널 2022/6/8일자 통권 1574호(긴급시사해설)

신고방법	소득계산	인적업무 등 서비스업	제조업, 음식·숙박업, 전기·가스 등, 건설, 운수, 창고, 부동산개발	농·임·어·광업, 도·소매, 부동산매매
1. 성실신고 확인 (복식부기)	외부세무대리인 성실확인	5억원 이상	7.5억원 이상	15억원 이상
2. 외부조정 필수 (복식부기)	외부 회계세무사	1.5억원~ 5억원 미만	3억원~ 7.5억원 미만	6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3. 자기조정신고 (복식부기)	본인, 대필자의 복식기장(합산자산표)	7,500만원~ 1.5억원 미만	1.5억원~ 3억원 미만	3억원~ 6억원 미만
4. 간편장부의무 (기준경비율)	수입 - 주요입증경비 - 기준경비율	2,400~7,500만원 미만	3,600만원~1.5억원 미만	6,000만원~3억원 미만
5. 추계신고 (단순경비율)	소규모입 소득 = 매출 × (1 - 단순경비율)	2,400만원 미만	3,600만원 미만	6,000만원 미만
6. ① 상기 5단계 소규모 사업자는 단순경비율만 적용해 추계신고해도 가산세가 없지만, ② 1, 2, 3 사업자의 경우는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하면 일정을 소득가산한 후 무기장가산세 20%가 추가됨. ③ 4의 간편장부의무자는 기준경비율 적용 소득금액과 단순경비율 적용소득금액 × 2.8배(3.4배) 중 적은 금액으로 신고 가능하나, 소득배율이 높아 의미 없음.				

● 창업시 직원 명의 차명주식을 명의 환원하려면 어떤 방법이 유리할까요?

- 안세재경저널 2022/6/15일자 통권 1575호(표지)

개념, 구분	현재 시점의 주식양도신고	과거 시점의 차명·증여신고
발생 경우	누적잉여금이 적어 주식 양도소득 적은 경우	누적잉여금이 커서 양도소득이 큰 경우

<p>액면가 1천만원 평가액 1억원 (중소기업, 소액주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명 5년 후 양도방식 환원거래 양도소득 1억 - 1천만원 - 250만원 = 8750만원 $\times 10\% \times 1.1$ = 962.5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증여세 1천만원 $\times 10\%$ = 100만원 무신고가산세 20% + 미납부가산세 11% $\times 5$년 = 75% 세금 100 $\times (1+75\%)$ = 175만원 현재의 양도소득이 커서, 과거의 차명 신고납부가 유리
<p>액면가 3천만원 평가액 5천만원 (중소기업, 대주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도소득 : 5천 - 3천 - 250만 = 1750만원 $\times 20\% \times 1.1$ = 385만원 이익 적고 주당평가액도 낮아 현재 양도소득이 과거 증여세보다 적으므로, 현재 기준의 양도가 유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명 5년, 3천만원 $\times 10\%$ = 300만원 가산세율 합 75% 세금합계 300 $\times (1+75\%)$ = 525만원
<p>결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업시 합류직원 이름이나 친인척 등의 명의로 차명 설립하고, 5년 지난 후 명의를 창업자 본인에게 환원시, 과거 차명의 증여세 + 5년 가산세 신고방법과 현재의 주식양도신고방법은 상황에 따라 세금의 차이가 있음. 차명금액, 지분비율, 현재평가액(=누적이익), 적용세율 구간(10%~50%)에 따라 차명증여세신고와 현재 양도세신고의 유리·불리가 다양한 상황임. 방법 : 청년창업, 법인 설립시 차명하지 않고 실질대호가 현명함. 	

● 법인이 대주주 보유주식을 자기주식으로 취득시 세금과 회계

- 안세재경저널 2022/6/15일자 통권 1575호(긴급시사해설)

◦ 사례 : 불입자본액면가 10억원의 10%를 6배인 6억원에 취득하는 경우임

개념, 구분	자기주식 취득 후 보유	자기주식 취득하여 소각, 감자
목적, 의도	대주주의 요청에 따른 자기주식취득과 일시 보유 후 주가관리 또는 외부 매각	일부 대주주에게 일정이익을 배당할 목적으로 자기주식취득 후 자본감소 감자(의제배당임)
회계처리 반영	(차) 자기주식 6억 (대) 현금 6억	(차) 자본금 1억원 (대) 현금 6억원 잉여금 5억원

재무제표의 자본계정 표시	불입자본금 10억원 - 자기주식 6억원 (자본조정)	이익잉여금 60억원은 그대로 유지됨	불입자본금 10억원 - 자본금 1 억원	이익잉여금 60억원 - 배당금액 5억 원
	순자기자본 4억원		자기자본 9억 원	이월잉여금 55억원
과세방법	대주주의 주식양도이익으로 과세 양도가 6억 - 불입원가 1억 = 양도차익 5 억 $\times 22\%$ = 1.1억원 ㉔		대주주에 대한 배당소득으로 과세 감자 총지급액 6억 - 불입원가 1억 = 배당 소득 5억의 종합소득세를 적용 = 최소 1.92억원 ㉕	
자기주식 최종 양도	(차) 현금 7억원 (대) 자기주식 6억원 자기주식 매각익 1억원		해당없음(이미 감자처리하여 없어짐)	
향후 추가 과세	자기주식 보유하다가 감자하면 최종 배당 중 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 1.92억원 ㉕ - 선 납주식양도세 1.1억 ㉔ = 추가납부액 0.82억원 + 가산세금		이미 배당종합소득으로 고율과세종결됨	

◎ 자산취득금액의 일부를 국고보조금으로 받은 경우의 회계·세무처리

- 안세재경저널 2022/6/22일자 통권 1576호(표지)

개념, 구분	반환하는 경우	일정조건, 기간 후 반환 보조금 수입	전액 일시지원 수입
거래판단	일종의 무이자 차입금	국가 등 부여하는 업무 수행	국가 등이 설비구입 단순 보조
취득시 처리	(차) 설비자산 1000 (대) 차입금 1000	(차) 설비자산 1000 (대) 현금예금 400 국고보조금 600	(차) 설비자산 1000 (대) 현금예금 500 보조금수입 500
연말표시	국가 등 차입금(부채) 반영	자산의 차감항목으로 반영 (차) 설비자산 1000 (국고보조금) (600)	보조금은 영업외 수익처리
감가상각	5년 가정 (차) 상각비 200 (대) 상각누계액 200	(차) 상각비 200 (대) 상각누계액 200 (차) 국고보조금 120 (대) 국고보조금 수입 120	(차) 감가비 200 (대) 상각누계액 200

세무익금	국고보조금 익금산입 안됨	국고보조금도 5년 상각으로 익금분할산입(손익계산서에 수입 반영)	국고보조 받은 연도에 전액 수익처리(익금산입됨)
세무조정	세무조정 없음	회계상 당기 수입반영하지 않은 경우 전액 익금불산입 ○유보 후 5년 분할 익금산입 가능함	세무조정 없음 (자동 익금산입됨)

● 임원의 조기은퇴 추가 지급액이 퇴직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됨에 따른 세금차이

- 안세재경저널 2022/6/22일자 통권 1576호(간급시사해설)

사례 :

1년 연봉 2억원, 총 퇴직금 5억원(10년 근속, 지급율 3배수) 중 조기퇴직 전별금 1억원의 세금 차이

개념구분	퇴직금으로 분류되는 경우	상여금 등 근로소득으로 분류	차이
퇴직연도 연봉의 한계세율	1.5억 ~ 3억원까지 : $38\% \times 1.1 = 41.8\%$ ㉑	좌동	없음
연봉에 대한 건보료	⊕ 6.47% ㉒	좌동	없음
추가소득 한계 부담율	= 48.27% (㉑+㉒)	48.27%	없음
총 퇴직금	5억원(전액)	퇴직금 4억원(+연봉 1억원)	⊖ 1억원
퇴직소득세 계산	(5억원 - 기본 400만원) ÷ 10년 × 12 = 595,200,000원 ●퇴직소득 공제액 : 151,700,000 + 103,320,000 = 255,020,000원	(4억원 - 400만원) ÷ 10 × 12 = 475,200,000원 ●퇴직소득 공제액 : 151,700,000 + 61,320,000 = 213,020,000원	⊖ 120,000,000원 (연환산)

퇴직소득세 계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퇴직소득 과표 : 595,200,000 - 255,020,000 = 340,180,000원 •연 환산세금 : 94,600,000 + 40,180,000 × 40% = 110,672,000원 •최종 세금 : 110,672,000 ÷ 12 × 10년 × 1.1 = 101,449,333원 ㉗ 	<ul style="list-style-type: none"> •퇴직소득 과표 : 475,200,000 - 213,020,000 = 262,180,000원 •연 환산세금 : 37,600,000 + 112,180,000 × 38% = 80,230,000원 •최종 세금 : 80,230,000 ÷ 12 × 10년 × 1.1 = 73,544,166원 ㉘ 	⊖27,905,167
1억원의 근로소득세 + 건보료 등	0	1억원 × 48.27% = 48,270,000원 ㉙	⊕48,270,000원
총 부담액	㉗ 101,449,333원	㉘ + ㉙ = 121,814,166원	⊕20,364,833원

●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부동산 양도과세, 법인 지분의 양도세 과세

- 안세재경저널 2022/6/29일자 통권 1577호(표지)

개념, 구분	개인사업자, 일반 개인	법인, 법인격 있는 단체
과세대상 범위	토지, 건물, 부동산권리, 부동산과다보유 법인의 주식(부동산 50% 이상 법인지분의 50% 이상 양도, 부동산 80% 이상 법인의 지분양도 등 열거주의 : 소득원천설)	법인 소유의 모든 자산과 부동산 등(순자산 증가설)
사업상 부동산	개인사업자용 부동산이어도 사업소득 아니고 부동산 양도소득으로 별도 과세	법인의 사업용 부동산은 법인세로 과세 비사업용 부동산이나 주택은 추가 과세
적용세율 등	차익 × 일반양도세율(6%~10억원 초과부터는 45%)	일반세율 10%, 20% 등 적용 + 추가 법인세 (= 법인주택은 20%, 비사업용 토지는 10%)

처분시 예정신고	강제규정, 양도월말부터 다음달 2개월내	예정신고절차나 예납의무 없음
최종 확정신고	1년간의 여러 양도소득을 합쳐 다음연도 5월 말일까지 종합신고납부	양도차익도 1년간의 일반소득에 합산함 + 양 도차익의 추가법인세 (12월말 법인은 3월 말까지 신고납부)

◎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부동산 양도과세, 법인 지분의 양도세 과세**
 - *안세재경저널 2022/6/29일자 통권 1577호(긴급시사해설)*

개념, 구분	국내 거주자의 과세방법	비거주자의 과세방법
거주자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주소 한국인 •국내 183일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 183일 이상 근무기간인 취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 •한국인으로서 국내 183일 미만 거주 •한국인으로서 외국 시민권자 · 영주권자 등
과세범위	무제한 납세의무(국내외 · 전세계 소득 과세)	제한납세의무(국내원천소득만 과세)
소득 · 세액 공제	대부분 적용됨(가족공제됨)	적용 안되거나 제한적용(배우자 등 가족공제 안됨)
인적용역소득 (근로소득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적 종속근무 : 근로소득, 정산 •개인적 자유사업소득 : 3.3% 원천징수 후 (5월말) 종합소득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업허가 근로소득 : 내국인과 동일과세 •개인적 자유소득 : 22% 원천징수 종결, 해외현지국 소득으로 합산
양도소득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과세 (양도가 - 취득원가 = 양도소득의 다단계 누진세율(6~45% 적용)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거주자와 동일한 과세(6~45%) + 지방주민세 10%도 납부 •1세대 1주택 비과세 불가능
증여세	국내외 모든 재산과세 - 가족 · 배우자 증여공제	국내증여재산만 과세, 배우자 공제 안됨
상속세	국내외 모든 재산 과세 - 기초일괄공제(5억) · 배우자공제(5억 이상 등)	국내상속재산만 과세, 배우자공제 안됨



이달의

특 집

2022 세금절약 가이드

- 국세청 -

01. 기초 세금상식

▶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 상품(재화)등을 판매하거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 그러나, 다음과 같이 생활필수품을 판매하거나 의료·교육관련 용역을 제공하는데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곡물, 과일, 채소, 육류, 생선 등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판매
 - 연탄·무연탄, 복권의 판매
 - 병·의원 등 의료보건의용역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의 진료용역은 2011. 7. 1. 이후 제공하는 용역부터 과세
 -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을 말함) 등 성형수술(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면세)과 악안면 교정술(치아 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면세)과 색소모반·주근깨·흑색점·기미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향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의 진료용역은 2014. 2. 1. 이후 제공하는 용역부터 과세

-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학원, 강습소, 교습소 등 교육용역업
- 도서, 신문, 잡지(광고 제외)

◎ 개별소비세

-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이외에 개별소비세와 개별소비세 납부에 따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도 내야 합니다.
 - 투전기·오락용 사행기구 등과 수렵용 총포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 보석 및 귀금속류 제조·수입자 (1개당 500만 원 초과분)
 - 고급시계(1개당 200만 원 초과분), 고급용단(200만 원, m²당 10만 원 곱한 금액 중 큰 금액 초과분), 고급가방 (1개당 200만원 초과분, 2014.1.1.이후), 고급모피 등 (1개당 500만원 초과분), 고급가구(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 초과분), 정원 8명 이하 승용자동차 (경차 제외), 석유류, 유연탄 (2014.7.1.이후), 담배(2015.1.1.이후)
 - 경마장, 경륜장·경정장, 투전기 설치 장소, 골프장, 카지노 등 과세(영업)장소
 - 룸싸롱,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카바레, 요정 등 과세유흥장소

◎ 소득세

- 사업자는 연간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 사업자가 종업원을 채용하여 월급을 줄 때에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고 · 납부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사 업 자	신고 · 납부기한		신고 · 납부할 내용
부 가 가치세	법인사업자	1기 예정	4. 1. ~ 4. 25.	1. 1. ~ 3. 31.의 사업실적
		1기 확정	7. 1. ~ 7. 25.	4. 1. ~ 6. 30.의 사업실적
		2기 예정	10. 1. ~ 10. 25.	7. 1. ~ 9. 30.의 사업실적
		2기 확정	다음해 1. 1. ~ 1. 25.	10. 1. ~ 12. 31.의 사업실적
	개인사업자 (일반)	1기 확정	7. 1. ~ 7. 25.	1. 1. ~ 6. 30.의 사업실적
		2기 확정	다음해 1. 1. ~ 1. 25.	7. 1. ~ 12. 31.의 사업실적
	개인사업자 (간이)	확정신고	다음해 1. 1.~1. 25.	1. 1.~12. 31.의 사업실적

소득세	개인사업자 (과세·면세)	확정신고	다음해 5. 1.~5. 31.	1. 1.~12. 31.의 연간 소득금액
		중간예납 (11.15. 고지)	11. 1.~11. 30.	중간예납 기준액의 1/2 or 중간예납 추계액
개 별 소비세	과세 유흥장소	다음달 25일까지		1개월의 유흥음식요금
	과세장소	분기의 다음달 25일까지 (석유류, 담배는 다음달 말일까지)		3개월의 입장인원
	과세물품 제조·수입			3개월의 제조장·보세구역 반출가격(기준가격 초과분)
	과세 영업장소	다음 해 3월 말일까지		1년간 총매출액
사 업 장 현황신고	개인 면세사업자	다음해 1. 1. ~ 2.10.		1. 1.~ 12. 31.(폐업일)의 면세수입금액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 고	원천징수 의무자	일반사업자	다음달 10일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
		반기납부자	7. 10. / 다음해 1. 10.	

※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달 25일(석유류, 담배는 판매 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람은 [유흥음식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과세유흥장소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02. 사업자등록 안내

◎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며 (단,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면 됩니다. (인터넷 홈택스 www.hometax.go.kr에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 사업개시 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이나 사업 계획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확정일자 신청할 경우 임대차계약서 원본)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도면 1부(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 법인의 경우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정관,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금출처명세서(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경영자)
- 신탁 계약서 1부(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신탁 재산 사업자등록의 경우)
- 임대주택 명세서 1부(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6호 서식, 주택임대사업을 하려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은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발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사전확인 대상 사업자의 경우 현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발급될 수 있습니다.

◎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을 개시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업자 등록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상품이나 시설자재 등을 구입하고 구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가 되려면 간이과세 적용신고도 함께 하여야 합니다.

- 간이과세 적용신고는 사업자등록신청서의 해당란에 표시하면 됩니다.

간이과세 적용기준

- 대상사업자 : 연간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가격)가 8,000만 원(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자
- 8,000만 원(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미만자라도 아래 사업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간이과세 배제사업
 - ① 광업
 - ② 제조업(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
 - * (간이 허용)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 양복점업, 양장점업, 양화점
 - ③ 도매업(소매업을 경영하는 경우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 및 상품중개업
 - ④ 부동산매매업
 - ⑤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를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⑥ 부동산임대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⑦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
 - ⑧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사업자

- ⑨ 사업장의 소재 지역과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 ⑩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가 경영하는 사업
- ⑪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 ⑫ 건설업(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
 - * (간이 허용) 도배, 실내 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
- ⑬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
 - * (간이 허용)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복사업, 기타 국세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 고시' 참조)
- 일반과세 적용을 받는 다른 사업장이 있는 경우
(다만, 개인택시·용달차운송업, 이·미용업 등의 간이과세는 당해 사업 연간 공급대가 8,000만 원 미만인 경우 계속 적용)
-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 받은 사업
- 복식부기의무자가 경영하는 사업
-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매출액 합계가 연간 공급대가 8,000만 원(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이상인 경우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무거운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 개인 : 공급가액의 1%(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0.5%와 5만원 중 큰 금액)
 - 법인 : 공급가액의 1%
-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상품 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하게 됩니다.

03. 사업자등록 신청하기 전에

▶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먼저 확인하시면 등록절차가 쉬워집니다.

◎ 과세업종인지 면세업종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은 과세사업자등록을, 면제되는 사업은 면세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할 때에는 과세사업자등록만 하시면 됩니다.

◎ 사업자의 유형을 먼저 결정하여야 합니다.

- 사업형태를 개인으로 할 것인가, 법인으로 할 것인가 또는 사업자의 유형을 일반과세자로 할 것인지, 간이과세자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개인과 법인은 창업절차 등 세법상 차이점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선택하여야 하나, 선택하기가 어려울 경우 먼저 개인으로 시작을 하고, 나중에 사업규모가 커지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는 다시 매출액의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되지만 간이과세자에 해당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업자는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신청하여야 하기 때문에 업종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 관련법규의 허가·등록·신고대상 업종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 허가·등록·신고 업종인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 시 허가증·등록증·신고필증 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약국·음식점·학원 등 허가, 신고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하는 업종인 경우 관련 인허가 기관으로부터 먼저 허가 등을 받아야 합니다.

◎ 공동사업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이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 또한 공동으로 하는 사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동업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챙깁니다.

- 사업자등록신청 시 업종에 맞는 구비서류를 잘 챙기셔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 국세청 누리집(국세정책/제도 → 사업자등록안내) 참조 또는 '126 국세상담센터'에 문의

04. 사업자 유형

◎ 사업형태에 따른 구분

사업자 유형은 사업형태에 따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란 회사를 설립하는데 상법상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그 설립 절차가 간편하고 휴·폐업이 비교적 간단하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란 법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격을 취득한 법인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 등도 포함되며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 과세유형에 따른 구분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됩니다. 다만, 과세와 면세 겸업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이 과세사업자로 발급됩니다.

- 과세사업자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도 소득세 납세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사업규모에 따른 구분

개인 과세사업자는 사업의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 합니다.

- 일반과세자

연간 매출액(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매출 합계액, 부가가치세 포함)이 8,000만 원(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 장소는 4,800만 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일반 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사업과 관련된 물건 등을 구입 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매출액이 8,000만 원(부동산 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 별로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나,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

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개인과 법인의 세제상 주요 차이

구 분	개인기업	법인기업
납 부 세 금	소득세	법인세
세 율 구 조	6 ~ 45% (8단계)	10 ~ 25% (4단계)
납 세 지	사업자 주소지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기 장 의 무	간편장부 / 복식부기(원칙)	복식부기
외 부 감 사 제 도	없음	직전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 법인 등

05. 확정일자 신청안내

▶ 상가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임차인이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 확정일자란?

-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의 존재사실을 인정하여 임대차계약서에 기입한 날짜를 말합니다.

◎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임차한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후순위권리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확정일자는 사업자등록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확정일자 신청대상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의 보증금 환산액)이 지역별로 다음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 역	환산보증금
서울특별시	9억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부산광역시	6억9천만원
광역시(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군지역 제외, 부산광역시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경기),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5억4천만원
기타지역	3억7천만원

※월세의 보증금 환산 : 월세×100

◎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면

-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규사업자

- 사업자등록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원본
-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법령에 의하여 허가·등록·신고 대상인 경우)
- 사업장 도면(건물 공부상 구분등기 표시된 부분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
- 본인 신분증(대리인이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 사업자등록신청 시 임대차계약서의 사업장소재지를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 소재지와 다르게 기재한 경우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철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사업자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임대차 계약이 변경된 경우)
- 임대차계약서 원본
- 사업장 도면(건물 공부상 구분등기 표시된 부분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
- 본인 신분증(대리인이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06. 민원서류 신청 시 구비서류

◎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

1. 사업자등록신청서
2.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허가 전인 경우 허가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3.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신청할 경우 임대차계약서 원본)
4. 도면(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5. 자금출처명세서(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경영자)
6. 동업계약서(공동사업인 경우)
※ 신청인신분증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신분증, 위임장 등 위임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화물운송·건설기계대여업 사업자등록 신청

1. 사업자등록신청서

2. 건설기계대여업 신고증(건설기계대여업), 자동차등록원부(화물운송업) 사본
3. 기타 참고 서류
 - 위·수탁 관리 계약서, 지입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납세관리인 설정신고서(납세자 인감증명서 1부, 외국인 제외)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등 위임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개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1.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서
2. 사업자등록증 원본
3.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신청할 경우 임대차계약서 원본)
4. 도면(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5.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허가 전인 경우 허가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 ※신청인신분증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신분증, 위임장 등 위임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교회 등 고유번호 신청

1.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2. 법인설립허가증(소속단체는 소속확인서)
 - (대표자가 소속확인서 내용과 상이한 경우 대표자 선임근거서류 추가)
3. 정관, 협약 등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또는 단체의 성격을 알 수 있는 서류
4. 대표자 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신청할 경우 임대차계약서 원본)
6. 단체직인
 - ※ 신청인신분증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신분증, 위임장 등 위임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휴)폐업신고

1. (휴)폐업신고서
2. 사업자등록증 원본
 - ※ 신청인신분증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신분증, 위임장 등 위임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사업자등록신청 및 휴폐업신고는 인터넷 홈택스에서도 가능합니다.

◎ 민원증명 신청

1. 민원신청서
2. 신청인(본인 또는 대리인) 신분증

3. 위임하는 경우, 위임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신분증(사본) 또는 법인인감증명서(사본), 기타의 경우 위임자 본인의 신분증(사본) 또는 인감증명서(사본)

※ 민원증명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모바일 홈택스, 무인민원발급기, 정부24, 주민센터 등에서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관련 문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126 국세상담센터

07.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큰 피해를 입습니다.

◎ 사업과 관련된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나옵니다.

-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상 대표인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세금이 고지됩니다.
- 더구나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근로소득이나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되어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 실제로는 소득이 없는 데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자료가 발생되므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못 낼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재산이 압류되어 공매되는 등 재산상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 명의를 빌려간 사람의 재산이 있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소유재산이 압류되며, 그래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공매처분하여 밀린 세금에 충당합니다.
- 체납사실이 금융회사 등에 통보되어 은행대출금의 변제요구 및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되는 등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이 외에도 출국금지 조치를 당하는 등 생활에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 실질사업자가 밝혀지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책임은 피할 수 없습니다.

- 명의를 빌려간 사람과 함께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명의대여 사실이 국세청 전산망에 기록·관리되므로 본인이 실제 사업을 하고자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명의대여로 인한 피해 사례

사례 1

- 가정주부인 김○○는 절친한 이웃 박△△(女)가 김○○명의로 사업자등록만 한 후 곧 폐업하겠다고 하여 50만원을 받고 박△△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줌.
- 박△△는 김○○명의로 사업자등록 후 사업을 하면서 많은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음.
- 김○○는 이후 2년여 동안 명의대여 사실을 잊고 생활함.
- 박△△가 신고·납부하지 않은 세금 4천만원이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김○○에게 부과됨.
- 세금의 체납으로 김○○의 소유주택 및 예금이 압류됨. (예금 1천 2백만원은 세무서에서 체납 세금에 충당함)
- 금융회사 등에 체납사실이 통보되어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됨.

사례 2

- 한○○씨는 생활정보지에 실린 구직광고를 보고 취직을 하였는데 사장인 최△△가 주민등록증·인감증명서·신분증을 달라고 해서 무심코 건네줌.
- 최△△는 한○○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은행 예금계좌 개설·신용카드 가맹을 하고 6개월간 유흥주점 사업을 함.
- 최△△가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세금 2천 5백만원이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한○○에게 부과됨.
- 최△△는 행방불명이며 세금체납으로 한○○의 예금이 압류되고 신용카드 사용도 정지됨.(예금 8백만원은 세무서에서 찾아 체납 세금에 충당함)
- 한○○씨는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의 변제 독촉도 받고 있음.

※ 타인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어 사업이 개시된 이후에는 명의자 본인이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절대 명의를 빌려 주어서는 안됩니다.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안내

국세청에서는 홈택스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상태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 분	홈택스 누리집 (www.hometax.go.kr)
제공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등록상태(계속사업자, 휴·폐업 여부) • 과세유형(과세유형전환 이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가장 최근 유형전환된 날짜, 간이과세자 간 변경 이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가능 또는 발급 불가능하게 된 날짜) ◇ 주민등록번호로 조회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등록 유무
서비스 명칭	•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조회/발급 → 사업자 상태)
공동인증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 공동인증서(로그인) 불필요 • 주민등록번호로 조회 - 공동인증서 필요

- 사업 운영 단계(사업자의 세금신고·납부) -

01.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란 어떤 세금인가?

-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text{부가가치세} = \text{매출세액} - \text{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1) 일반사업자

-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 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1기 1. 1.~6. 30.	예정신고	1. 1.~3. 31.	4. 1.~4. 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 1.~6. 30.	7. 1.~7. 25.	개인사업자
		4. 1.~6. 30.	7. 1~7. 25.	법인사업자
제2기 7. 1.~12. 31.	예정신고	7. 1.~9. 30.	10. 1.~10. 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7. 1.~12. 31.	다음해 1. 1.~1. 25.	개인사업자
		10. 1.~12. 31.	다음해 1. 1.~1. 25.	법인사업자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

- 개인 일반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4월·10월에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징수해야 할 금액이 50만 원 이상일 경우)가 예정고지되고, 고지된 금액은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차감됩니다.

2) 간이과세자(1년에 1회 신고)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1. 1.~12. 31.	다음해 1. 1.~1. 25.

※ 다만, 7. 1.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 (간이 → 일반)와 예정부과기간 (1. 1.~6. 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 1.~6. 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 25.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의 구분

구 분	기준금액	세액계산
일반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8,000만 원(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이상	매출세액(공급가액 ×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간이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8,000만 원(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미만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매입 시에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그 세액을 공제 받지 못하므로 세부담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1) 2021.7.1. 전

업 종	부가가치율
전기 · 가스 · 증기 · 수도	5%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0%
제조업, 농 · 임 · 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2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30%

2) 2021.7.1. 이후

업 종	부가가치율
1.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5%
2. 제조업, 농업 · 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
3. 숙박업	25%
4.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한다), 정보통신업	30%
5.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한다), 사업시설관리 ·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40%
6. 그 밖의 서비스업	30%

《 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 Top10 - 부가가치세 》

Q1. 2021년 10월 신규 개업한 일반과세자로서 실적이 없는데,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인가요?

A1. 신규 개업하여 실적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무실적으로 202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보이는 ARS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무실적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무실적 전자신고 경로]

① 홈택스 전자신고

• 일반 과세자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 정기신고(확정/예정)

⇒ 기본정보 입력 화면의 하단에 있는 '무실적신고' 버튼 클릭

• 간이 과세자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 정기신고(확정/예정) ⇒ 기본정보 입력 화면의 하단에 있는 '무실적신고' 버튼 클릭

② 모바일 홈택스 전자신고

- 모바일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 간편신고 ⇒ 무실적 신고

③ 보이는 ARS ☎ 1544-9944로 전화

- 보이는 ARS 선택 ⇒ 부가가치세 신고 ⇒ '무실적신고' ⇒ 사업자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신고서 작성 ⇒ 신고서 제출

Q2.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개인판매자로서 거래건수 20건 이하인데,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해야 하나요?

A2.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른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므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등 인터넷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의 경우 거래건수나 매출금액에 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라면 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
이나 일시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사업자의 정의(부가가치세법 제2조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 사업자등록(부가가치세법 제8조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물품을 판매한 후 거래처에서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받는 자의 파산, 강제집행 및 기타 사유 등으로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대손금액 × 10/110)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제도 개요(부가가치세법 제45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받은 자의 파산, 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손금으로 인정하는 경우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 그 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주는데, 이를 '대손세액공제'라 합니다.

☞ 대손세액 = 대손금액(공급대가) × 10/110

- 대손세액공제제도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을 때 이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제도이므로, 부가 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합니다.

▶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②)**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법에서 정한 사유로 대손이 확정된 것에 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법 개정(2020년 1월 1일 이후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

▶ **대손세액 공제절차(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④)**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려 하거나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더하려는 사업자는 부가 가치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Q4. 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인 간이과세자 요건은 어떠한 경우이며 세금계산서 발급 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표기를 어떻게 하나요?

A4.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 중 영수증 발급 업종 경영 사업자를 제외한 간이과세자는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이때 공급대가를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로 나누어 발행하여야 합니다.

예) 간이과세자가 상품을 1,100,000원에 판매한 경우

- 공급가액 = 1,100,000원(공급대가) \times 100/110 = 1,000,000원
- 세 액 = 1,000,000원(공급가액) \times 10% = 100,000원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간이과세자

직전 연도 공급대가(연 매출액)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2021년 7월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영수증 발급 업종 중 소매업 등 일부 업종*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여객운송업 중 전세버스운송사업, 운수업, 주차장 운영업, 부동산중개업 등

▶ 대상

직전 연도 공급대가(연 매출액)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
(직전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12개월로 환산)

▶ 적용기간

1년년의 공급대가(연 매출액)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

▶ 관련 법규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36조의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Q5. 간이과세자는 연매출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가 면제라던데 10월에 개업하여 연매출 4,500만 원인데 최종납부할 세액이 나왔 습니다. 왜 그런가요?

A5. 계속사업자의 경우 연매출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면제이나,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간이과세자는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위의 경우 10월~12월의 3개월간 매출이 4,500만 원이면 연환산 매출액은 1억 8천만 원 (4,500만 원 \div 3개월 \times 12개월)이므로 납부의무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면제

해당 연도 공급대가(연 매출액)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 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 대상

해당 연도 공급대가(연 매출액)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12개월로 환산)

▶ 납부 시 환급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를 자진 납부하면, 관할 세무서 에서 환급해 줍니다.

▶ 관련 법규

부가가치세법 제69조

Q6. 간이과세자 적용범위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 8,0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었다고 하는데 부동산임대업도 적용 받을 수 있나요?

A6. 간이과세자 적용범위가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 원 미만에서 8,0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었지만, 부동산 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기존 4,800 만 원 미만의 기준을 유지합니다.

● **간이과세의 적용범위**

"간이과세자"란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의 합계액이 8,000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 부동산임대업 또는 「개별소비세법」 제10조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 하는 사업자는 4,800만 원 미만

- 다만, 간이과세기준금액(8,000만 원 또는 4,800만 원) 미만자라도 부가 가치세법 시행령 제109 조 제2항에 따른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연간 환산금액)이 8,000만 원(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 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은 4,800만 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면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과세 적용 여부를 함께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로 합니다. 다만, 간이과세배제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부가 가치세법 제61조 ④).

Q7.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등은 매입세액으로 공제 가능한가요?

A7.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의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 신청일 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것은 과세사업과 관련한 것이라면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가능 합니다.

예) 등록 전 주민번호 기재 세금계산서 등 수취 시 매입세액공제 가능 판단

① 1기(1월 1일 ~ 6월 30일) 중 매입세액은 7월 20일까지 사업자 등록 신청 시 매입세액공제 가능

- ② 2기(7월 1일 ~ 12월 31일) 중 매입세액은 다음 연도 1월 20일 까지 사업자등록 신청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 공제하는 매입세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과 수입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공급받는 시기 또는 수입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할 수 있습니다.

-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

▶ 신규사업자의 과세기간

(일반적인 경우):사업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등록 전 신청*):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 *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 신청 가능

▶ 관련 법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8조, 제38조, 제39조

Q8. 사업 관련하여 물품을 구매하고 영수증을 받았는데,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가요?

A8.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이 있더라도 세금계산서(또는 매입자 발행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 아닌 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았다면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미기재 되었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 공제하는 매입세액의 범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상대방 으로부터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아래 증빙을 수취하고 제출·보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해당 거래에 대한 공급시기에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정해진 기한 내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

▶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의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로서 일정 요건(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제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보관) 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당초 거래에 대한 공급시기에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발급하는 매입자 발행세금계산서로서 예정신고, 확정신고, 경

정청구를 할 때에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 관련 법규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34조의2, 제38조, 제39조, 제46조

Q9. 사업과 관련하여 승용차를 구입한 경우, 차량 구입 · 유지비 관련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A9.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정원 8명 이하 자동차로 한정,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 이하 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 등 제외)의 구입,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 있더라도 공제되지 않는 것이나,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경 비업법에 따른 출동차량에 한정) 및 이와 유사한 업종에 직접적으로 영업에 사용되는 것(영업용)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	상세내용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 부실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제출하였더라도 기재 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수정신고 · 경정청구 · 기한 후 신고와 함께 제출 하거나, 경정 시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는 경우 에는 매입세액 공제 가능
세금계산서 미수취 · 부실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그 밖의 기재 사항으로 보아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 · 관리함으로써 발생한 매입세액 등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 답변에서 열거된 업종 외 사용하는 자동차를 구입 · 임차 · 유지하는데 발생한 매입세액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접대비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 사업과 관련된 매입 세액
면세사업 및 토지 관련 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및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
사업자등록 전 매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자등록 신청 전 발생한 매입세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 내 매입세액 공제 가능

Q10.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세금 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한가요?

A10. 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도 일반과세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한 경우에는 [매입액(공급대가) × 0.5%]로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 범위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제도 안내

내 용	이 전	현 행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수증 발급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칙)세금계산서 발급 (예외)영수증 발급(신규사업자 및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억원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달 하는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1년간 신규 개업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최초로 사업 개시한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세기간(1월 1일 ~ 12월 31일)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연 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 예 정부과기간 신고의무

02.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납부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개요

2022년 5월은 지난 해(2021년 귀속)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납부 하는 달입니다. 법에서 정한 종합소득(이자 · 배당 · 사업 · 근로 · 연금 · 기타 소득)이 있는 사람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 할세무서장에게 신고 · 납부하여야 합니다.

*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고 · 납부

◆ 신고대상자

- 거주자 : 국내 · 외에서 발생한 소득 중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 및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 비거주자 : 국내에서 발생한 원천소득 중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 및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 신고대상 소득

- 종합소득금액 : 이자 · 배당 · 사업 · 근로 · 연금 · 기타소득금액을 합계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별지 제40호 서식)*를 합니다.
- 퇴직 · 양도소득 : 종합소득과 구분하여 별개로 확정신고(별지 제40호의2 및 제84호 서식)**를 하여야 합니다.

◆ 신고기간(2022년 신고분)

구 분	과세기간	신고기간
일반적인 경우	2021. 1. 1.~12. 31.	2022. 5. 1.~5. 31.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서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2021. 1. 1.~12. 31.	2022. 5. 1.~6. 30.
과세기간 중 사망(출국)시	2021. 1. 1.~사망(출국)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 (또는 출국일 전일까지)
2022. 1. 1.~5. 31.중 사망(출국*)시	2021. 1. 1.~12.31. 2022. 1. 1.~사망(출국)일	

* (출국자 구분신고)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장을 폐업하지 아니하고 이민 등으로 출국하는 경우에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은 출국일 전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출국하는 다음날부터 국내 사업장을 폐업하는 날까지는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 소득을 종합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근로소득, 퇴직소득,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경우(단, 근로소득 및 공적연금소득 연말정산시 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하여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음)
- 보험모집인 · 방문판매원 · 음료품배달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단, 간편장부대상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에 한함)
- 원천징수되는 기타소득으로서 종교인소득만 있는 자(2018.1.1.부터)
- 원천징수된 이자 · 배당소득만 있는 사람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미달 소득자
-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자

◆ 확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경우

- 일용근로자 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 공적연금소득 · 종교인소득 (2018.1.1.부터)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시에 합산신고 하지 아니한 자 및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퇴직소득을 합산신고하지 아니한 자
- 보험모집인 · 방문판매원 · 음료품배달원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 연말정산 방법으로 신고하지

- 않았거나, 2인 이상의 사업자로부터 소득을 받았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
-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 연금소득, 퇴직소득·종교인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 2020. 1. 1.부터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별도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홈택스로 소득세를 신고하시면 홈택스(국세)·위택스(지방세) 실시간 연계시스템을 통해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번에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납부 및 환급

◆ 납부

자진납부계산서(영수증서)에 납부할 종합소득세액을 기재하여 5. 1.~5. 31.(성실 신고확인대상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5. 1.~6. 30.)에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하며, 홈택스 등을 통해 전자납부도 가능합니다.

◆ 분할납부(자진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	분납할 세액	분납기한
1천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	1천만 원 초과금액	납부기한이 지난 후
2천만 원을 초과	납부할 세액의 50%이하	금액 2개월 이내

◆ 환급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고기한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에 기재한 은행(우체국)의 예금계좌로 환급금을 송금받거나 환급통지서를 통해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 Top10 - 종합소득세

Q1.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A1.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단, 비과세*또는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 제외)와 무조건 종합 과세대상인 경우에는 동 금액을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 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비과세: 공익신탁 이익, 장기저축성보험 보험차익,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 저축 이자, 재형저축 이자·배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HSA) 이자·배당 등(세부요건 생략)

** 무조건 분리과세: 경락대금 이자, 비실명 금융소득,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등

●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란?

-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는 금융소득에도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부담의 공평 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
 -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금융회사 등에서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종합과세 ×).
 - 2천만 원 초과인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종합과세 ○).

▶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

25%로 원천징수된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2천만 원 초과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

- 금융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종합과세 제외 금융소득 = 비과세 금융소득 + 분리과세 금융소득
-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 = 금융소득 - 종합과세 제외 금융소득

Q2. 올해 신규 개업한 사업자도 장부를 꼭 기장하여야 하나요?

A2.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추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를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다만, 신규 개업자(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 제외)와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는 국세청에서 정한 간편장부를 기장하여 계산한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기장능력이 부족한 소규모사업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기장의무 · 경비율 판단기준

국세청 누리집 - 국세청(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 장부기장 의무 안내 > 기장의무 판단

아울러, 간편장부대상자도 복식부기에 의해 신고할 수 있으며, 기장을 근거로 한 재무상태표 등 서식과 그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성실하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20%를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기장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장부란?(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합니다.

● 장부의 요건(통칙160-208...1)

1. 장부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법에 규정하는 총수입금액·소득금액 및 과세 표준의 계산이 가능하여야 한다.
2. 총수입금액·소득금액 또는 과세표준의 정당여부가 장부에 의하여 비교적 용이하게 감사(조사)될 수 있어야 한다.
3. 장부가 세금계산서·계산서 또는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기록되어야 한다.

● 기장세액공제 적용 제외자(소득세법 제56조의2 ②)

-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의 20% 이상을 누락하여 신고한 사업자
- 기장세액공제와 관련된 장부 및 증명서류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로 부터 5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사업자(천재·지변 등 일정한 사유 해당 시는 제외)

Q3. 간편장부란 무엇이며, 어떻게 기장하여야 하나요?

A3. 소규모 개인사업자가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처럼 쉽고 간편하게 작성하여 소득금액 계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도록 국세청장이 제정·고시한 장부를 말하며,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를 기장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정식 장부를 기장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 간편장부 안내에 수록된 작성요령과 간편 장부를 다운받아 작성하거나, 가까운 문방구점에서 구입 또는 전산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이용하시면 됩니다.
- 거래가 발생한 날짜 순으로 거래내용, 거래처,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 매입액 등 비용 지출에 관한 사항, 고정 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면 됩니다.

● 간편장부 기장에 대한 혜택

-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합니다.
 - 무기장가산세(20%) 적용 배제
 -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15년간 이월결손금 공제가능*
 - 부가가치세 매입·매출장 작성의무 면제 등
- * 2008년 12월 31일 이전 발생한 결손금은 5년간 공제, 2009년 ~ 2019년 발생분은 10년간 공제, 2020년 이후 발생 결손금은 15년간 공제

● 간편장부대상자가 소득세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 ①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별지 제40호 서식(1))
- ②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별지 제82호 서식)
- ③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별지 제82호 서식 부표)
- ④ 기타 부속서류

※ 확정신고 시 간편장부 및 증명서류는 제출하는 것이 아님

Q4.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에 의하지 않고 추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을 때 어떤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나요?

A4.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고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해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 무신고가산세 = 신고 납부할 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 (부정 무신고의 경우 신고 납부할 세액의 40%와 수입금액의 0.14% 중 큰 금액)

○ 무기장가산세 = 종합소득산출세액 × (미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간편장부대상자(소규모사업자* 제외)가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 경비율로 추계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 신규 개업한 자,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4,800만 원 미만인 자,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자

- 무기장 사업자의 가산세 등의 적용(소득세법 제81조의 5, 소득세법 제70조 ④,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 ①, ②)

구분		가산세액	비 고
복식부기 의무자	무신고 가산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무신고의 경우 : 가산세 대상금액의 20%와 수입금액의 7/10,000 중 큰 금액 ● 부정무신고의 경우 : 가산세 대상금액의 40%*와 수입금액의 14/10,000 중 큰 금액 	-
	외부조정 대상자		자기조정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적용됨 (소득46011- 1294, 1997년 5월 9일)
	무기장 가산세	가산세 대상금액의 20% (소규모사업자는 제외)	-
간편장부 대 상 자	무기장 가산세	가산세 대상금액의 20% (소규모사업자는 제외)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시 산출세액의 20% 기장세액 공제 (한도 100만 원)

*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60%

-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을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만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⑥)

- 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소규모사업자'의 범위(소득세법 시행령 제132조 ④)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 금액 포함)이 4,800만 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간편장부대상자로서 연말정산 되는 사업소득만 있는자(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품배달원)의 사업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 정산을 한 경우

Q5. 성실신고확인제란 무엇인가요?

A5. 성실신고확인제는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 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 기재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고기한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입니다.

⇒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임

*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기준

국세청 누리집 - 국세청(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 성실신고확인제도 안내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 성실신고확인제란?

-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 성실신고확인자 및 필요성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이 성실신고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③). 신고납세제도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사업자의 장부기장 내역과 과세소득의 계산 등 성실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무전문가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지원

성실신고확인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확인비용의 60%(120만 원 한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일정한 의료비 및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지출금액의 15%(난임시술비의 경우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2022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20%

▶ 2021년 귀속 성실신고확인 대상 기준(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2021년 수입 금액을 적용합니다.

업종별	2021년 수입금액
1.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15억 원 이상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 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 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7억 5천만 원 이상

3. ㉠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 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위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소득세법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중 사업서비스업(변호사업, 세무사업, 회계사업 등 15개 업종)	5억 원 이상
--	---------

Q6. 간편장부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는 경우도 있나요?

A6. 장부 기장의무와는 별개로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에 해당하면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판단기준

국세청 누리집 - 국세청(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 성실신고확인제도 안내

Q7. 주택임대소득은 어떤 경우에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나요?

A7. 주택 월세 및 보증금(전세금)에 대한 보유 주택수 별 과세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유 주택수 (부부합산)	과세 대상	
	월세 수입	보증금·전세금
1 주택	· 아래 주택만 과세 - 국외주택 -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국내주택	· 과세 안 함
2 주택	· 모든 주택 과세	· 과세 안 함
3 주택 이상	· 모든 주택 과세	· 아래에 동시 해당하면 과세 - 非소형주택, 3채 이상 보유 - 해당 주택 보증금 합계 3억 원 초과

* 소형주택: 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인 주택

●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은 과세기간 중 어느 한 기간이라도 과세기준에 해당 하는 주택 수를 보유하고 그 중 1주택 이상을 임대하였을 경우로 구체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유 주택 수별

① (1주택)기준시가가 9억 원이 넘는 국내소재 주택 또는 국외소재 주택으로 부터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보증금은 과세 안함)

② (2주택)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보증금은 과세 안함)

③ (3주택 이상)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 또는 보증금*합계가 3억 원을 넘는 경우

- 임대유형별

- ① (월 세)기준시가가 9억 원이 넘는 국내소재 1주택 보유자, 국외소재 1주택 보유자, 2주택 이상 보유자
- ② (보증금) 보증금 * 합계가 3억 원을 넘는 3주택 이상 보유자
- * 소형주택(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은 보증금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

Q8.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우대혜택과 소형주택임대 사업자 세액감면을 받기 위한 임대주택 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8. 아래의 방법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 사업자등록(지방자치단체)과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세무서)을 모두 하여야 합니다.

*** 렌트홈**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과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함께 신청 가능

- 렌트홈(www.renthome.go.kr) > 임대사업자등록 신청 > 화면 제일 아래 “국세청 사업자 신고” 체크

*** 홈택스**

-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만 신청 가능
- 홈택스(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 > 사업자등록 신청(개인)

※ 렌트홈에서 임대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을 모두 신청하는 경우 세무서 사업자 등록 신청은 불필요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서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신청서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함께 제출한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20조 ③)

- (민원인) 주소지(또는 주택소재지) 관할 지자체를 먼저 방문하여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함께 제출
-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 후 등록증 사본과 사업자등록 신청정보를 국세청으로 온라인 통보
- (세무서) 사업자등록신청 화면에 수신된 사업자등록 신청정보를 확인하고 사업자등록 처리 및 사업자등록증 발급

Q9. 착한임대인 상가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 인가요?

A9.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인(법인·개인 모두 가능)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의 임대료를 할인한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 할 수 있습니다.

- ①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②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계속 임차하여 영업 목적으로 사용한 자 (영업개시 전 인테리어 공사기간 포함)
- ③ 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④ 사행행위업 등 배제업종이 아닌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란?

- 임차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임대사업자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 대 상: 임차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임대사업자

▶ 공제기간: 2020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 공제방법: 소득세·법인세 신고 시 세액공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

▶ 제출서류: ① 임대료 인하 직전 임대차계약서
② 임대료 인하 합의 증명서류(약정서, 합의서 등)
③ 임대료 지급 확인서류(세금계산서, 금융증빙 등)
④ 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발급)

Q10. 기타소득(일시적 인적용역 등)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A10. 아래 무조건 분리과세와 무조건 종합과세 되는 기타소득을 제외한 기타소득이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고 연간 300만 원 초과되는 경우는 종합과세로 종합소득세 신고 · 납부하여야 합니다. (조건부과세)

1) 무조건 분리과세 (소득세 원천징수로 과세 종결)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
- 승마투표권 · 승자투표권 · 소싸움경기투표권 ·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 슬롯머신 등의 당첨금품 등
- 서화 ·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및 운용수익을 연금 외 수령한 금액

2) 무조건 종합과세 (반드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함)

- 뇌물
-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 계속적·반복적 소득으로 사업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확정신고 하여야 합니다.

● 기타소득이란?

- 소득세 과세대상소득으로서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 소득 외 소득 중 소득세법 제21조에 열거된 소득을 말합니다. 대체로 일시적·우발적 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해당되며,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행위를 통해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로 보아야 합니다.

▶ 기타소득 과세 방법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됩니다. 다만, 복권당첨금 등 과 같이 일부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대부분 원천징수로 종결)를 허용하고 있으며, 연간 기타 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03.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

발급의무 개시일	발급의무 대상
2011. 1.	법인사업자
2012. 1.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
2014. 7.	직전연도 공급가액 3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
2019. 7.	직전연도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
2022. 7.	직전연도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이 2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발급 · 전송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산세 부과

- ※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2%, 단, 의무자가 종이세금계산서 발급시 1%, 자신의 다른 사업장 명의로 발급시 1%), 지연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1%), 지연수취가산세(0.5%)
- ※ 미전송가산세(0.5%), 지연전송가산세(0.3%)

◎ 전자계산서(면세)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

발급의무 개시일	발급의무 대상
2015. 7. 1.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2016. 1. 1.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2017. 1. 1.	전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2019. 7. 1.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2022. 7. 1.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2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총수입금액: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 공급가액 및 면세 수입금액의 합계액임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 ◆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 누리집에서 발급
- ◆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사업자(ASP, ERP)를 통한 발급
- ◆ 기타 발급방법(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 ※ 전화 ARS(☎126-1-2-2)로 발급, 세무서 방문하여 대리발급 신청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전송기한

- ◆ 발급기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단, 월합계(세금)계산서의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 ◆ 전송기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날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전송 혜택

- ◆ (세금)계산서 보관의무 면제
- ◆ 부가가치세 등 신고 시 합계표 개별명세 작성 불필요
-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건당 200원, 연간 1백만 원 한도)
 - 대상자: 직전 공급가액이 3억 원 미만인 개인 일반과세자
- ◆ 전자계산서 발급세액공제(건당 200원, 연간 1백만 원 한도)
 - 대상자: 직전 총수입금액이 3억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04.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를 시행

전문직, 병·의원,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사업자 등은 건당 10만 원 이상 거래금액(부가세 포함)에 대하여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제외]

◎ 적용대상 업종(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 3)

구 분	업 종
사업 서비스업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보건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비뇨기학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의원(마취통증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숙박 및 음식점업	일반유흥 주점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을 포함한다), 무도유흥 주점업,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운영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고시원 운영업에 한정한다)
교육서비스업	일반 교습 학원, 예술 학원,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운전학원,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목적용으로 한정한다),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학원, 기타교육기관
그 밖의 업종	가전제품 소매업, 골프장 운영업, 골프연습장 운영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예식장업,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부동산 투자 자문업, 산후조리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기타 미용업, 비만 관리 센터 등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 마사지업(발마사지업 및 스포츠 마사지업으로 한정한다), 실내건축 및 건축사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의류 임대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제1호에 따른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 (포장이사운송업으로 한정한다),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전세버스 운송업,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요업 제품 소매(거울·액자(내용물 없는 것), 주방용 유리 제품 소매업·관상용 어항 소매업에 한정), 안경 및 렌즈 소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악기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묘지분양 및 관리업, 장의차량 운영업, 독서실 운영업, 두발 미용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신발 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의복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소프트웨어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자동차 세차업, 벽지·마루 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공구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중고가구 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모터사이클 수리업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소매업(의무발행 업종에서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온라인 통신망을 통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밑줄 친 업종은 2022. 1. 1.거래분부터 발급의무 시행

◆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 하여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소비자는 당시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홈택스(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수정 →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에서 해당 현금영수증의 승인번호, 거래일자, 거래금액을 입력 후 등록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발급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현금영수증 미발급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2018. 12. 31. 이전 거래분에 대하여는 미발급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금 등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누리집「hometax.go.kr», 스마트폰「구글스토어/애플 앱스토어 - 국세청 홈택스 앱」또는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로 문의바랍니다.

05. 원천세 신고·납부

◎ 원천징수는 누가, 어떤 경우에 해야 하나?

- ◆ 원천징수는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하여야 합니다.
- ◆ 원천징수 대상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봉급, 상여금 등의 근로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 퇴직소득, 연금소득
 - 상금, 강연료 등 일시적 성질의 기타소득 • 인적용역소득(사업소득)
 -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봉사료

◎ 원천징수 세액의 납부

- ◆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은행·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회사에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반기별 납부 승인 또는 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자는 상반기 원천징수한 세액을 7. 10.까지, 하반기 원천징수한 세액을 다음 해 1. 10.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도 반기별로 제출하면 됩니다.

반기별 납부

- 반기별 납부대상자
 - 직전 과세기간(신규사업자는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 상시 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사업자(금융보험업 제외), 종교단체로서 세무서장의 승인 또는 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자
- 신청기간
 - 상반기부터 반기별 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 : 직전연도 12. 1.~ 12. 31.
 - 하반기부터 반기별 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 : 6. 1.~ 6. 30.

◎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 원천징수할 세액 = (지급액 - 필요경비) × 20%

◆ 필요경비

- 지급금액의 60%를 인정하는 경우
 - 일시적 인적용역(강연료, 방송해설료, 심사료 등)
 -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 · 지상권 설정대가
 -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은 원고료 · 인세 등
 - 상표권, 영업권, 산업상 비밀 등의 자산이나 권리의 대여금액
 - 통신판매 중개업자를 통한 연수입 500만 원 이하 물품 · 장소의 대여소득
- 지급금액의 80%를 인정하는 경우
 -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 · 부상
 -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 부상
 - 서화,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1억 원 이하 또는 10년 이상 보유 후 양도분 90% 인정) 단, 실제 사용된 필요경비가 80%(90%)를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
 - 계약의 위약 · 해약으로 받는 주택입주 지체상금
- 기타: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지급금액의 3%를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 전문지식인 등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직업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 의사 등이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등

◎ 봉사료의 원천징수

◆ 원천징수 대상

사업자가 음식 · 숙박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와 함께 봉사료를 받아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이를 접대부 등에게 지급하는 경우로서, 그 봉사료 금액이 매출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 원천징수 세액

봉사료 지급액의 5%를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 지방소득세 소득분의 원천징수

- ◆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는 원천징수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 소득분 으로 함께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 Top10 - 원천세

Q1. 원천세 반기별 납부제도란 무엇인가요?

- A1. 직전연도(신규사업자의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 상시고용 인원이 20명 이하(종교단체의 경우 상시고용인원 관계없음)인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반기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반기의 직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반기별 납부 신청을 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 받은 경우 반기별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원천세 반기별 납부제도란?

매월 납부해야 하는 원천세를 사업장의 신고·납부 편의를 위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하여 반기별로 합산하여 6개월에 한번 원천세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

직전연도 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납세조합, 금융보험업 사업자 제외)

▶ 신청기간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	신청 기간
상반기(1월~6월)	7월 10일까지	6월 1일~ 6월 30일
하반기(7월~12월)	다음해 1월 10일까지	12월 1일~12월 31일

Q2. 2021년 12월 귀속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2022년 1월 지급한 경우 간이지급명세서 언제 제출하나요?

- A2. 세법개정으로 2021년 12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2022년 1월 지급한 경우 2021년 12월말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2022년 1월말까지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사업소득)를 제출합니다.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란?

인적·물적시설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 소득 등을 말합니다.

예) 보험설계사, 학습지방문강사, 방문판매원 등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서식 작성방법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서식 작성방법에 따르면 해당 연도 소득을 12월 말까지 미지급 시 12월에 지급한 것으로 보도록 합니다.

Q3. 매도자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지하여 위약금을 지급한 경우 원천 징수 해야 하나요?

A3.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을 지급하는자(매도자)는 지급시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본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합니다.

▶ 대상

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하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는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 사례

- ① 주택분양 사업주체가 승인기한 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하여 입주자가 받는 지체 상금
- ②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청구의 소를 제기 하고 그 손해를 배상받게 되는 경우의 지연배상금
- ③ 부동산 매매계약 후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받은 위약금 또는 해약금
- ④ 퇴직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퇴직금과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의 지급지연 손해배상금

Q4. 지인에게 여유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는 경우에도 원천징수 해야 하나요?

A4. 금전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가 일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으로써 지급받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이익(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이자를 지급하는 자는 이자지급시 27.5%(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 혹은 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를 말합니다.

▶ 이자소득 총수입금액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대금으로 인하여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한 이자와 할인액 상당액입니다.

다만, 도산으로 재산이 없거나 무재산 사망하여 원금과 이자의 전부(일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합니다.

▶ 원천징수 시기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합니다.

Q5.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신청기한이 지나도 신청 할 수 있나요?

A5.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신청은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하는 것이며 신청기한이 지난 후에도 신청가능합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감면 제외대상 근로자

- ①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 ②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 ③ ②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 ④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 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 ※ 단, 「국민연금법」 제6조 단서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가입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제외

●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감면 제외대상 업종 예시

- ①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중 전문서비스업(법무관련, 회계·세무관련 서비스업 등)
- ② 보건업(병원, 의원 등)
- ③ 금융 및 보험업
- ④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 ⑤ 기타 개인 서비스업

Q6. 전 직장에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는데 이직할 경우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다시 신청해야 한다면 감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6.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다가 요건을 충족 하는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실 경우 재신청을 하셔야 하며 이때 감면대상 기간은 소득세를 최초로 감면받은 회사의 취업일 부터 기간중단 없이 계산합니다.

(예시) 2017년 4월 A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019년 4월 퇴사 후 2020년 4월 B 중소기업 취업시

→ 감면대상기간: 2017년 4월 ~ 2022년 4월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기간(202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경우)**

- 청년(15세~34세, 외국인 포함):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
- 60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
-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

● **경력단절 여성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요건**

- 해당 중소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해당 중소기업이 경력 단절 여성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 한함)하였을 것
-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의 사유로 퇴직하였을 것
- 동종 업종의 중소기업에서 퇴직한 날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
-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재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 감면

Q7. 일용근로자가 무엇인가요?

A7.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 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건설공사 종사자의 경우 1년) 이상 고용되지 않은 자를 의미합니다.

● **일용근로자에 대한 예규·판례**

-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의 의미는 그 근무단위가 시간이나 일단위가 아니라 월단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비록 팀메이트들이 일별로 볼 때 간헐적으로 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3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근무를 하였다면 이를 일반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국심2004서1167, 2005년 06월 27일).
- 소득세법상의 일용근로자라 함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건설 공사에 종사하는 자는 1년 이상)계속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하는 바, 위 경우 “근로계약”은 문서에 의한 계약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이라 함은 급여의 계산 방법을 말하는 것이고, 그 계산된 급여의 지급방법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22601-3392, 1985년 11월 14일).

- 일용근로자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3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되, 당해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받은 급여(일용근로소득 포함)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과 동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기질의회 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팀-488, 2007년 4월 16일)을 참조하기 바랍니다(원천세과-599, 2011년 09월 30일).

Q8. 일용근로자에서 상용근로자로 전환된 경우 언제부터 상용 근로자로 보나요?

A8. 일용근로자에서 일반급여자(상용근로자)로 전환된 경우 근로자가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건설공사종사자1년) 고용되는 경우 3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간이 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고 해당연도 1월 1일~12월 31일까지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 합니다.

이 때 ‘3월’ 이라 함은 고용일수(90일)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이지만, 간헐적으로 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3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일반근로자로 보게 됩니다.

● 일용근로자 원천징수 세액 계산(일당 20만 원으로 5일 근무하는 경우)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본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합니다.

계 산 구 조	금 액
총지급액(비과세 제외)	200,000원
(-) 근로소득공제(일 15만 원)	150,000원
(=) 일용근로 소득금액	50,000원
(×) 세율(6%)	
(=) 산출세액	3,000원
(-)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의 55%)	1,650원
(=) 결정세액	1,350원
※ 원천징수세액 : 1,350원 × 5일 = 6,750원(지방소득세 670원)	

- 결정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소액부징수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 일 총급여액이 187천원(결정세액 999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세액 없습니다.
 ※ 1일 20이상 사업장에서 일용근로 제공시 세액계산은 사업장별로 계산하여 소액부징수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원천세과-216, 2011년 04월 08일).
- 일용근로자의 납세의무는 원천징수로 과세 종료 * (완납적 분리과세)
 * 세율 6% 단일세율, 근로소득세액공제 외의 소득·세액공제 없습니다.

Q9. 2021년 하반기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 제출기한과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언제인가요?

A9.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발맞춰 적시성 있는 소득정보 파악을 위해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

가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7월 이후 소득 지급분부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를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제출주기가 변경되었습니다.(매월 제출)

- 2021년 7월 지급분(8월 제출)부터 달라진 내용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변경(소득세법 제164조)

구 분	종 전 (2021년 6월까지 소득 지급분)	변 경 (2021년 7월이후 소득 지급분)
제출시기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1, 4, 7, 10월) 말일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
예 시	2021년 2분기(4~6월) 지급분 > 7월 말일까지	7월 지급분 > 8월 말일까지, 8월 지급분 > 9월 말일까지 (매월 제출)

-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 제출주기 변경(소득세법 제164조의3)

구 분	종 전 (2021년 6월까지 소득 지급분)	변 경 (2021년 7월이후 소득 지급분)
제출시기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1, 7월) 말일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
예 시	2021년 상반기(1~6월) 지급분 > 7월 말일까지	7월 지급분 > 8월 말일까지 8월 지급분 > 9월 말일까지 (매월 제출)

Q10.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되는 식사대는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A10. 비과세되는 식사대란 근로자가 사내급식 혹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식사(음식물)을 제공받거나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경우 월10만 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 됩니다.

● 비과세되는 식사대 관련 해석 사례

- 식사대가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고, 회사의 사규 또는 급여지급기준 등에 식사대에 대한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당해 종업원이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2호에 규정된 금액은 비과세되는 식사대에 해당하는 것이나, 연봉계약서에 식사대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급여지급기준에 식사대에 대한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조의 규정이 적용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건설공사현장에서 제공되는 숙식비는 일용근로자의 일급여에 포함되나, 현물로 제공되는 식사는 비과세됩니다.

[법인46013-1556, 1997년 06월 11일]

06.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할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무신고 가산세

- 일반적인 경우 :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 납부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납부합니다. 다만, 아래사업자는 다음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합니다.

*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말 하며,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함.

법인세, 소득세법상 복식부기 의무자 max (①, ②)	① 무신고납부세액×20% ② 수입금액×7/10,000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 (①+②)	① 무신고납부세액×20% ② 영세율과세표준×5/1,000

- 부정행위인 경우 : 위 일반적인 무신고가 아닌 부정행위로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납부합니다.

다만, 아래사업자는 다음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합니다.

법인세, 소득세법상 복식부기 의무자 max (①, ②)	① 무신고납부세액×40% ② 수입금액×14/10,000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 (①+②)	① 무신고납부세액×40% ② 영세율과세표준×5/1,000

※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60%

◎ 과소신고 · 초과환급 가산세

- 일반적인 경우 :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는 다음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합니다.

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 등*×10%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 (①+②)	① 과소신고납부세액 등×10% ② 과소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5/1,000

*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함.

- 부정행위인 경우 : 위 일반적인 과소신고 · 초과환급 신고가 아닌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는 아래 ①, ②를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합니다.

- ①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 등 × 40%
- ② 일반과소신고 가산세 = (과소신고납부세액 등 -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 신고납부세액 등) × 10%
-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아래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합니다.

법인세, 소득세법상 복식부기 의무자 (max(①, ②)+③)	①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 등 × 40% ② 부정행위로 인하여 과소신고된 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 × 14/10,000 ③ (과소신고납부세액 등 -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 등) × 10%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 (①+②+③)	①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 등 × 40% ② (과소신고납부세액 등 -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 등) × 10% ③ 과소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 × 5/1,000

※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60%

◎ 납부지연가산세

-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내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또는 환급받은 세액을 초과하여 환급받은 경우에 부과합니다.

- ① 납부지연가산세 = 무납부(과소납부)세액 × 0.022% × 경과일수
- ② 환급지연가산세 =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 0.022% × 경과일수
- ※ 경과일수 = 납부기한 (환급받은 날)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일수
- ③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무납부(과소납부) 세액 × 3%

◎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제2항2호의 경우에는 징수한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아래 ①과 ②중 적은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합니다.
- ① 미납세액 · 과소납부세액 × 3% + 미납세액 · 과소납부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25/100,000
- 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50%(제1호의 금액과 제2호 중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부분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 가산세 감면

-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기한 후 신고 · 납부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감면합니다(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것은 제외)

내 용		가산세	감면율
수정신고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1개월 이내	과소신고 · 초과환급가산세	90%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75%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50%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		30%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20%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10%
기한 후 신고 · 납부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1개월 이내	무신고가산세	50%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

※ 상기 가산세 이외에도 개별세법에 그 밖의 가산세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 사업 폐업 단계(폐업신고) -

01.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폐업신고를 해야 한다.

사업을 그만두는 경우 사업을 시작할 때와 같이 그 종결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렇지 않을 때에는 커다란 손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는 어떻게 하나?

- ◆ 국세청 누리집에서 다운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가까운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 홈택스 가입자로 공동인증서가 있으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폐업신고가 가능합니다.
- ◆ 또한, 면허 또는 허가증이 있는 사업일 경우 당초 면허·허가를 받은 기관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단, 음식점업, 숙박업, 세탁소, 이·미용실, 약국, 피자방, 비디오방, 통신판매업 등의 인·허가 업종은 세무서나 시·군·구청 중 한 곳에서 폐업신고가 가능합니다 (대상업종은 가까운 민원실이나 126 국세상담센터로 문의).

◎ 폐업신고 등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 폐업신고를 한 경우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 폐업일까지의 실적에 대한 가산세 등을 추가부담하게 되어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지 않아 사업 인수자가 계속 사용하면 사업자 명의 대여에 해당되어 이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등록면허세가 계속 부과됩니다.

○ 면허·허가기관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년 1. 1.을 기준으로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등록면허세가 계속 부과됩니다.

◎ 폐업신고 후 폐업사실증명원을 국민연금공단 ·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제출하여야 보험료가 조정되어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02. 사업을 폐업할 때 꼭! 알아야 할 세금신고 사항

◎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 폐업 즉시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폐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 · 납부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폐업시기	신고납부대상
1기(상반기) 중 폐업 시	1. 1.~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
2기(하반기) 중 폐업 시	7. 1.~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

◆ 폐업 시 남아있는 제품이나 상품 등의 재화

자가공급에 해당되므로 폐업 시 잔존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감가상각자산의 간주공급

건물, 차량, 기계 등 감가상각자산도 세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시가를 계산하여 부가가치세

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의 포괄적 양도

사업의 경영주체만 변경되고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으며, 이 경우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납부

◆ 1. 1.~ 폐업일까지의 종합소득을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 1.~ 5. 31.까지 확정신고 · 납부하여야 합니다.

◆ 폐업한 사업과 관련된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는 합산하여 신고 · 납부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를 위한 세금(연말정산) -

01. 근로소득과 연말정산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 급여에 대한 세금은 매월 월급을 줄 때 그 소속기관이나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가 우선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고 다음해 2월분 월급을 줄때 1년 분의 정확한 세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 맞춤형 원천징수세액 선택
 - 근로자가 본인의 부담 수준에 맞게 원천징수세액을 간이세액표의 80%, 100%, 120%로 선택 가능합니다.
- 급여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으면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고,
- 다른 소득이 있으면 연말정산을 한 후 다른 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세 계산

● 계산절차

연 간 급 여 액
(-) 비 과 세 소 득
총 급 여 액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 각종 소득공제
과세표준
(×) 세율
산출세액
(-)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납부(환급)할세액

● 근로소득공제(상용직 공제한도 2,000만원)

총급여액	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의 70%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500만원 초과 금액의 40%
1,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1,500만원 초과 금액의 15%
4,5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 금액의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 초과 금액의 2%
일용근로자	1일당 15만원

● 세율(2021년 귀속)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 1.5억원 이하	35%	1,490만원
1.5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42%	3,540만원
10억원 초과	45%	6,540만원

◎ 주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 인적공제 및 연금보험료 공제

과세표준	공제요건 및 공제한도액
기본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본인포함) : 1인당 150만원 직계존속 : 60세 이상, 근로자의 배우자(연령제한 없음) 자녀·형제자매 : 20세 이하, 60세 이상, 위탁아동 : 18세 미만(보호기간이 연장된 위탁아동은 20세 이하) 생계급여수급자(연령제한 없음)
추가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녀자공제 : 50만원 장애인 : 1인당 200만원 경로우대 : 1인당 100만원(70세 이상) 한부모공제 : 100만원(부녀자공제와 중복적용시 한부모공제 적용)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보험료 : 전액

• 특별소득공제

구 분	공제금액 및 공제한도액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고용보험료 전액
주택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마련저축 및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 (연 300만 원 한도)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300~1,8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기 15년 이상 고정금리 and 비거치식 : 1,800만 원 - 만기 15년 이상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 1,500만 원 - 만기 15년 이상 기타 : 500만 원 - 만기 10년 이상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 300만 원 * (주택요건) 기준시가 5억원 이하

• 기타 소득공제

구 분	소득공제액 및 공제한도액								
개인연금저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0. 12. 31. 이전 개인연금저축 가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의 40% 공제 (연 72만원 한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신용카드 등 사용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 총급여액의 25% 초과분 (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의 도서 · 공연 · 박물관 · 미술관 사용분 30%, 전통시장 · 대중교통 40%, 2021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공제한도) 급여수준별 차등 적용 <table border="1"> <thead> <tr> <th>총급여액</th><th>공제한도</th></tr> </thead> <tbody> <tr> <td>7천만원 이하</td><td>총급여액의 20%와 300만 원 중 적은 금액</td></tr> <tr> <td>7천만 원 ~ 1억2천만 원</td><td>250만원</td></tr> <tr> <td>1억2천만 원 초과</td><td>200만원</td></tr> </tbody> </table>	총급여액	공제한도	7천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20%와 300만 원 중 적은 금액	7천만 원 ~ 1억2천만 원	250만원	1억2천만 원 초과	200만원
총급여액	공제한도								
7천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20%와 300만 원 중 적은 금액								
7천만 원 ~ 1억2천만 원	250만원								
1억2천만 원 초과	200만원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 저축납입액 (600만원 한도)의 40% 공제 (연 240만원 한도) 								

• 특별세액공제 등

구 분	세액공제대상 및 세액공제율
자녀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자녀 (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에 대해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부터는 7세 이상에 대하여 적용 - 1~2명인 경우 : 1명당 연 15만 원 - 3명 이상인 경우 : 연 30만 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 원을 합한 금액
연금계좌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액공제대상연금계좌 연 700만 원 +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추가납입액의 10% (300만원 한도) = 총 1000만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SA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 금액이 없는 경우 연금 저축계좌는 400만 원 (50세 이상은 600만 원). 단 총급여액 1억 2천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자는 300만 원 한도 • 세액공제율 : 세액공제 대상액의 15% (총급여액이 5천5백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 원 초과자 12%)

특별 세액 공제	보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액공제대상 보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보장성보험료 지출액(연 100만 원 한도) : 세액공제 대상액의 12%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지출액(연 100만 원 한도) : 세액공제 대상액의 15%
	의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액공제대상 의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부양가족의 경우 700만 원 한도, 본인·장애인·65세 이상자의 의료비 및 난임시술비는 한도 없음) ●세액공제율 : 세액공제 대상액의 15%(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교육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액공제대상 교육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취학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300만 원 한도, 대학생의 경우 900만 원 한도, 본인·장애인의 경우 한도 없음) ●세액공제율 : 세액공제 대상액의 15%
	기부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액공제대상 기부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자금기부금 한도액: 근로소득금액 × 100%, 세액 공제율: 10만 원 이하 100/110, 10만 원 초과 15%(3천만 원 초과분 25%) - 법정기부금: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100%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30% - 지정기부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는 경우 한도액(①+②) ①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공제액) × 10%} ② (㉠, ㉡ 중 min) ㉠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공제액) × 20% ㉡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기부금 · 종교단체 기부금이 없는 경우 한도액 (근로소득금액-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 공제액) × 30% * 세액공제율: 법정기부금 + 지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20%(1천만 원 초과분 35%)
	표준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소득자가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대해서는 연 13만 원을 산출세액에서 공제
기타 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인 세대주(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 제외) -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임차 - 월세 지출액(750만 원 한도)의 10%(총급여 5천5백만 원(종합소득금액 4천5백만 원) 이하 12%)

02. 보험료 세액공제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소득요건, 나이요건 제한 있음)를 위해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보험료의 12%(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료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공제 대상

세액공제 대상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세액공제율
보장성 보험료*	연 100만원 한도	12%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료**	연 100만원 한도	15%

* :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

** :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 납입영수증 등에 '장애인전용 보험'으로 표시된 보험

◎ 공제시기

- 보험료 납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세액공제

◎ 근로자가 부담할 보험료를 회사가 지급

- 보험료를 사용자가 지급하여 주는 경우 보험료 상당액은 근로자의 급여액에 가산하고 보험료 세액공제합니다.
- 다만,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단체보장성보험은 급여에 포함되지 않으며 또한 보험료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맞벌이부부가 계약자는 본인, 피보험자는 배우자로 보험 가입

- 보험료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하였을 때 공제 가능하므로,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료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다만, 맞벌이 부부인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

- 보험계약자가 소득요건 또는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당해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당해 근로자가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피보험자가 태아인 보장성 보험

- 태아는 아직 출생 전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료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일시 납부한 보험료

- 보험계약기간이 2019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인 보험의 보험료를 2019년 6월 일시에 납부한 경우 납부일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세액공제하며, 월별로 안분하지 않습니다.

◎ 연도 중 해약한 보험의 보험료

- 해당 연도에 불입한 보험료는 보험을 해약하더라도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 미납분 보험료 공제 여부

- 보험료는 당해 연도에 납입한 금액에 한하여 공제 가능하므로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는 실제로 납부한 연도에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 ◎ 2018년 귀속부터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도 공제대상에 추가 되며, 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합니다.

03. 의료비 세액공제

◎ 의료비 세액공제

- 당해연도 1. 1.~12. 31.까지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의 15%(난임시술비는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세를 계산(연말정산)할 때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 그러나, 지출된 의료비를 전부 공제해 주는 것은 아니고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중에서 700만 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 다만, 근로자 본인, 장애인, 65 세 이상자, 중증질환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와 임신을 위해 지출하는 난임시술비, 미숙아 ·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는 추가로 공제됩니다.

$$\text{총급여액} = \text{연간 급여액} - \text{비과세 소득}$$

- 기타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

※장애의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처음 한 번만 제출하면 됩니다.

04. 교육비 세액공제제도

◎ 국내 교육비 공제

-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세를 계산(연말정산)할 때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 공제대상이 되는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를 위해 교육기관에 낸 입학금 및 수업료와 기타 공납금, 보육비용 및 수강료 등과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입니다.
 - 교육기관에는 초·중·고·대학 및 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뿐만 아니라 학점은행제·독학학위 취득 교육과정 및 직업 훈련과정도 포함되며, 근로자 본인은 대학원도 해당됩니다.
 - 방과 후 학교 수강료, 교과서대, 급식비도 공제됩니다(어린이집·유치원생·초·중·고등학생).
 - 현장학습비(1인당 30만 원)와 교복구입비(1인당 50만 원, 중·고등학생)도 공제됩니다.
 - 소득세·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장학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이 공제됩니다.
- ※학원 수강료는 취학 전 아동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세액공제 대상 한도액

본 인	직 계 비 속 등	
전액 (직장에서 보조받은 비과세되는 학자금은 제외)	영유아·유치원생·취학전 아동	1인당 300만원
	초·중·고등학생	1인당 300만원
	대학생	1인당 900만원
	장애인 특수교육비	전 액

• 계산사례

- 유치원생 자녀교육비가 250만원이고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 200만원 중 직장에서 받은 비과세 학자금이 100만원인 경우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액 계산
 - 자녀의 교육비 공제액 250만 원
 - 본인의 교육비 공제액 200만 원 - 100만 원 = 100만 원
 - 합계 : 350만 원

◎ 국외 교육비 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위하여 국외교육기관에 낸 입학금·수업료, 기타 공납금 등이 공제됩니다.
 - 국외 근로자인 경우
 - 본인 및 국외에서 함께 동거하는 부양가족
 - 국내 근무자인 경우
 -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가 교육비를 지급한 학생
 - 단,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생·중학생의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자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
- 소득세·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이 공제됩니다.
- 세액공제 대상 한도액
 - 국내 교육비와 같음
- 제출서류
 -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영수증
 - 국외 교육비공제 적용 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교육비 세액공제 절차

- 교육비 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연말정산 시 근무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교육비 납입영수증(홈택스 www.hometax.go.kr에서 제공)
 - 교육부, 여성가족부 또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관에서 발급하는 교육비 납입내역서
 -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그 금액의 범위 안에서 근무처에 이미 제출한 재학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05. 주택자금 소득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 공제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포함)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 또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하고 그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40%를 소득공제(공제한도 300만 원) 합

니다.

※ 주택마련저축공제와 합하여 300만 원 한도(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도 소득공제 가능)

◆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 이 경우,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 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을 포함
 -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있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
-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 전세와 월세 보증금을 위해 차입한 자금

◆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한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경우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인 사람만 해당
-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이자율(1,000분의 12)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 (2020.3.13.~2021.3.15.까지: 1.8%)
 - 공제시 필요한 서류: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사본, 원리금 상환 증명서류(계좌이체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예외적으로 세대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포함)인 근로자가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제외)을 취득하기 위하여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 하고 금융회사 · 주택도시보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아래의 한도로 공제합니다.

상환기간 15년 이상			상환기간 10년 이상
고정금리이고 비거치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	기타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
1,800만 원	1,500만 원	500만 원	300만 원

[공제한도 종전규정]

- . 2014년 이전 차입분 500만 원(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대출: 1,500만 원)
- . 2011년 이전 차입분(상환기간 15년 이상: 연 1,000만 원, 30년 이상: 연 1,500만 원 한도)
- . 2003년 이전 차입분(상환기간 10년 이상: 연 600만 원, 15년 이상: 연 1,000만 원 한도)

※ 2014년~2018년 차입분은 ‘국민주택규모 기준 삭제’ 및 ‘기준시가 4억 원으로 상향조정’

※ 2013년 이전 차입분은 종전규정(국민주택규모 기준 및 기준시가 3억 원)을 적용

◆ 공제대상자

- 근로자로서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배우자는 떨어져 있어도 동일세대로 봄)
- 세대주가 주택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자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실제 거주 필요)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요건

-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또는 10년 이상일 것
 - * 2009. 2. 12.부터 1년간 서울지역 외의 미분양주택 또는 신규분양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차입하는 경우 상환기간 5년 이상인 경우 포함
-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 ※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해당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채무자 = 소유자” 요건 위반 시 요건 위반일 이후부터 불공제(이전분은 공제)

◆ 소득공제 배제

-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소득공제 배제
 - ※ 2014. 1. 1. 이후 과세기간 중 2주택 이상 보유하는 경우 ‘3개월 초과 기준’ 삭제

◆ 세대원인 근로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공제요건

-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아니할 것
- 취득한 주택에 세대원인 해당 근로자가 실제 거주할 것

06.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근로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30%, 40%)를 공제합니다.

◆ 신용카드 등 공제비율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공제액: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40%를 소득공제

결제수단 및 사용처별	공제율
신용카드	15%
직불 · 선불카드 · 현금영수증	30%
도서 · 신문 · 공연 · 박물관 · 미술관 사용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해당)	30%
전통시장 · 대중교통사용분	40%

- 202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2021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의 10%
- 2022 전통시장 사용금액 중 2021년 전통시장 사용금액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의 10%

◆ 공제대상

- 근로자 본인 · 배우자 · 직계존비속의 사용액(기본공제대상자로서 나이제한 없음)
 - 형제자매 및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사용액은 제외

◆ 공제금액 및 공제한도

- 공제금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급여액의 25%) × (15%~40%)
- 공제한도: Min(연간 300만 원, 총급여액의 20%)
 - * 총급여 7천만 원 초과자 250만 원, 1.2억 원 초과자 200만 원
 - 한도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초과금액과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비 등 사용액, 2022년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2022년 전통시장 소비증가분 중 적은 금액을 각각 1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

◆ 공제금액 계산방법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금액 0원
- 공제금액: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에 해당하는 금액

- ① 신용카드 사용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합계액-전통시장사용분 - 대중 교통이용분 - 도서·공연 등 사용분 -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사용분) × 15%
- ②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사용분[전통시장·대중교통, 도서·공연 등 이용(사용)분에 포함된 금액 제외] × 30%
- ③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 30%
- ④ 전통시장 사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 40%
- ⑤ 대중교통 이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 40%
- ⑥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에서 차감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 ≤ ①: 최저사용금액 × 15%
 - ① < 최저사용금액 ≤ (①+②+③): ① × 15% + (최저사용금액 - ①) × 30%
 - 최저사용금액 > (①+②+③): ① × 15% + (②+③) × 30% + (최저 사용금액 - ① - ② - ③) × 40%
- ⑦ 202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2021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의 10%
- ⑧ 2022 전통시장 사용금액 중 2021년 전통시장 사용금액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의 10%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것

- 사업관련비용 지출액
-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자동차 구입비용. 단, 중고차 구입금액은 10%를 사용금액에 포함
-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지불액
- 학교 및 보육시설에 납부한 수업료, 보육비 등
- 국세·지방세, 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정보사용료·인터넷이용료 등 포함)·아파트 관리비·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 이용료 포함) 및 도로통행료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 리스료(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 포함)
-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 금융·보험용역과 관련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등
- 기부금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월세액
- 국가·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지급하는 사용료·수수료 등의 대가

※ 다만, 우체국 택배,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 골프장, 스키장, 기타 운동시설 운영,

보건소에 지급하는 비용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포함

- 면세물품 구입비용(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 법 제121조의13에 따른 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비용)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중복 적용 여부

구 분		특별공제 항목	신용카드공제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가능
신용카드로 결제한 보장성보험료		보험료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불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	취학전 아동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가능
	그 외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교복구입비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가능
신용카드로 결제한 기부금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불가

※ 취학전 아동의 경우에는 주 1회 이상 월 단위로 교습받는 학원, 체육시설 등의 수강료에 대하여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07. 영수증을 챙기세요.

▶ 다음의 영수증을 모으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등의 혜택으로 더 많은 혜택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 물건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받아 놓으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영수증

- 신용 · 직불 · 기명식신불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기명의로 아닌 다른 가맹점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업소를 여신전문금융협회에 신고한 후 위장가맹점으로 확정되면 여신전문금융협회에서 건당 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의료비 영수증

- 병 · 의원의 치료비, 치료 등을 위한 의약품구입비, 건강검진료 등 가족의 의료비 지출액에 대하여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외국의료기관에 지출한 치료 비용은 제외

◎ 보험료 영수증

-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는 소득공제, 일반보장성보험료는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맞벌이부부인 경우 계약자가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모두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교육비 영수증

- 교육기관에 납입한 가족의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취학 전 아동의 학원 수강료 등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치후원금 영수증

- 일반 국민이 정당(후원회 및 선관위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연말정산 시 10만원까지는 100/110의 세액공제를 받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5/100(3천만원 초과분은 25/10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금 영수증

- 수재의연금, 불우이웃성금, 장학금, 종교단체 기부금 등을 낸 경우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해 자원봉사한 경우에도 「봉사일수×5만원」의 금액이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봉사일수=총봉사시간/8시간 (소수점 이하 1일로 계산)

08. 연금과 세금

◎ 연금소득의 범위

◆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의 소득으로 합니다.

◆ 과세대상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로 인출하는 경우의 그 연금
- 기타 위와 유사한 연금 형태로 받는 소득

◎ 연금소득의 구분

◆ 연금계좌(사적연금)

-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 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
-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가입하여 설정하는 계좌 (퇴직연금계좌)

◆ 공적연금

-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노령연금, 연계퇴직연금

◎ 비과세 연금소득

◆ 다음의 연금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 장해연금, 상이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군포로가 받는 연금

◎ 연금소득세 계산법

◆ 계산절차

연 간 연 금 액
(-)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 과 세 소 득
총 연 금 액
(-) 연 금 소 득 공 제
연 금 소 득 금 액
(-) 각 종 소 득 공 제
과 세 표 준
(×) 세 율 (6%~45%)
산 출 세 액
(-) 각 종 세 액 공 제
(-) 기 납 부 세 액
납 부 (환 금) 할 세 액

◆ 연금소득공제

총연금액	공 제 액
350만 원 이하	전액 공제
350만 원 초과 700만 원 이하	350만 원 + 3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700만 원 초과 1,400만 원 이하	490만 원 + 7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1,400만 원 초과	630만 원 + 1,4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 (연 900만 원 한도)

◎ 연금소득 과세방법

◆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연계노령·퇴직연금)은 매월 연금을 지급할 때 지급기관에 간이세액표에 따라 우선 원천징수하고, 1월분 연금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합니다(종합소득과세).

◆ 연금계좌의 경우 지급기관에서 3%~5%의 세율로 원천 징수를 한 후 연금 수령자가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총연금액이 연 1,200만 원 이하인 사적연금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퇴직소득과 세금

◆ 퇴직소득(퇴직금)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며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을 말합니다.

◆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소득분이 과세되며, 퇴직금을 줄 때 그 소속 기관이나 사업자, 퇴직연금 사업자 등이 이를 원천징수합니다.

◆ 퇴직으로 인한 소득 중 다음 소득은 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비 과 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따라 근로자·선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상병보상금, 일시보상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행방불명보상금, 소지품유실보상금, 장의비 및 장제비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요양비, 요양 일시금, 장해보상금, 사망조위금, 재해부조금, 재난부조금 또는 신체·정신상의 장해·질병으로 인한 휴직 기간에 받는 급여

◎ 퇴직소득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계산

가. 과세표준(소득세법 제14조 ⑥)

퇴직소득과세표준은 퇴직소득금액에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나. 산출세액(소득세법 제55조)

1) 종전(2015. 12. 31. 이전) 계산방법

거주자의 퇴직소득 산출세액은 2013. 1. 1. 이후 근속연수 해당분과 2012. 12. 31. 이전 근속연수 해당분으로 구분하여 계산하며, 2013. 1. 1. 이후의 근속연수는 전체 근속연수에서 2012. 12. 31. 이전 근속연수 해당분을 빼서 계산한다(①+②).

① 2013. 1. 1. 이후 근속연수 해당분

$$\text{퇴직소득 산출세액} = \frac{\text{퇴직소득과세표준}}{\text{근속연수}} \times 5 \times \text{기본세율} \div 5 \times \text{근속연수}$$

② 2012. 12. 31. 이전 근속연수 해당분

$$\text{퇴직소득 산출세액} = \frac{\text{퇴직소득과세표준}}{\text{근속연수}} \times \text{기본세율} \times \text{근속연수}$$

● 소득세법 부칙 (11611호, 2013. 1. 1.)

제22조(퇴직소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이 이 법 시행 후에 발생하는 경우 해당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근무를 시작하여 이 법 시행 후에 퇴직한 자의 경우 해당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이 법 시행 전의 근속연수 비율(2012. 12. 31. 까지의 근속연수를 전체 근속연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해서는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 개정(2016. 1. 1. 이후) 계산 방법

거주자의 퇴직소득 산출세액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산출한다.

① 퇴직소득 과세표준

$$\text{환산급여}\{(\text{퇴직소득금액}-\text{근속연수공제})\div\text{근속연수}\times 12\}-\text{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	차등공제
8백만 원 이하	환산급여의 100%
7천만 원 이하	8백만 원+(8백만 원 초과분의 60%)
1억 원 이하	4천520만 원+(7천만 원 초과분의 55%)
3억 원 이하	6천170만 원+(1억 원 초과분의 45%)
3억 원 초과	1억 5천170만 원+(3억 원 초과분의 35%)

② 퇴직소득 산출세액

$$\text{퇴직소득 산출세액} = \{(\text{퇴직소득 과세표준} \times \text{기본세율}) \div 12\} \times \text{근속연수}$$

③ 경과조치(소득세법 부칙 제12852호, 2014. 12. 23.)

2016. 1. 1. 부터 2019. 12. 31. 까지의 기간 동안 퇴직한 자에 대해서는 2015. 12. 31. 이전 계산방법에 의한 산출세액과 2016. 1. 1. 이후 계산방법에 의한 산출세액에 아래에 따른 연도별 적용비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text{퇴직소득 산출세액} = (\text{㉗} \times \text{연도별 적용비율}) + (\text{㉘} \times \text{연도별 적용비율})$$

〈연도별 적용비율〉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㉗ 2015. 12. 31. 이전 계산방법	60%	40%	20%	0%
㉘ 2016. 1. 1. 이후 계산방법	40%	60%	80%	100%

다. 세율(소득세법 제55조)

퇴직소득은 퇴직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과세표준	세 율	누진공제
1천 200만 원 이하	6%	—
4천 600만 원 이하	15%	1,080,000원
8천 800만 원 이하	24%	5,220,000원
1억 5천만 원 이하	35%	14,900,000원
3억 원 이하	38%	19,400,000원
5억 원 이하	40%	25,400,000원
10억 원 이하	42%	35,400,000원
10억 원 초과	45%	65,400,000원

09. 소득 · 세액공제 증명서류 중점 확인사항(연말정산 시)

원천징수의무자는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 과다공제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사전에 방지 하기 위하여 회사에 제출된 증명서류에 대해 아래의 항목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 특히, 수동발급 공제 증명서류의 경우 중복공제, 과다공제의 사례가 많습니다.

구분	중점 확인사항
인적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과세기간에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을 새로이 추가하는 경우 중복공제 및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 원) 초과 여부를 근로자에게 직접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1.1) 전 사망자·국외이주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님
주택자금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자(개인)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 여부 확인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을 통해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인지 확인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 여부 확인 - 등기부등본, 대출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받아 주택의 근로자 본인 소유 여부, 국민주택 규모 여부(2013년 이전 차입분),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 및 저당 여부, 대출 계약기간이 10년 또는 15년 이상인지 여부, 취득 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2013.12.31. 이전 3억 원, 2014.1.1.~ 2018.12.31. 차입분 4억원) 여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이상 보유 여부, 대출조건(비거치식, 고정금리 등) 확인
주택마련저축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등본 상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 여부 확인 •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소득공제 신청하였는지 확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공제대상자인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제외하였는지 확인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한 배우자 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제외하였는지 확인
연금계좌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을 연금계좌세액공제 항목으로 잘못 신청하였는지 확인 • 수동으로 납입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중도해지(공제 불가) 또는 본인명의 여부 확인
보험료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장성보험료의 경우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지 여부 확인
의료비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비속 등의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 명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지출하였는지 확인 • 사내근로복지기금·보험회사(실손보험금)·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를 제외하였는지 여부 확인(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하지 않은 의료비 공제 불가)
교육비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 학원비는 취학 전(입학연도 1월~2월 까지)에 지출한 경우 공제가능 •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것인지 확인 • 비과세 학자금을 지원한 경우 근로자가 교육비 공제를 제외하였는지 확인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한 교육비(과세제외)를 제외하였는지 확인
기부금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동 제출 기부금영수증 상 '일련번호' 유무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련번호가 없는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기부금 표본조사 대상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음 • 기부금단체가 적격 단체에 해당하는지 영수증에 기재된 근거법령을 통해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종교단체의 경우 총회나 중앙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인지 여부는 기부금영수증, 소속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 - '고유번호증'의 유무가 적격 기부금 종교단체 여부 판단기준이 아님에 유의 - 사주, 궁합, 택일, 작명 등 대가성 비용을 지출하고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은 공제불가 -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았는지 여부 확인

	단, 기획재정부장관 지정이 없더라도 관련법령에서 적격 기부금단체로 규정한 법인도 있으므로 ‘기부금영수증 상 기부금단체 근거법령’을 확인하여 적격 기부금 단체 여부 판단
월세액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 저축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세대원인 근로자 가능) 여부 확인 • 근로자 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자인지 여부 확인 • 주민등록표등본 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지가 동일한지 여부 확인 <p>※ 2014.1.1. 이후 임대차계약서 상 확정일자를 받을 요건 삭제</p>

※ 주택자금공제의 경우 동일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와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인 근로자가 공제 가능

《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 Top10 - 연말정산》

Q1. 직장에서 퇴사하여 연도 말 현재 직장이 없는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A1. 근로자가 연도 중에 퇴직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직장)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하고 퇴직자에게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중도퇴직에 따른 연말정산시 공제받지 못한 소득·세액공제자료가 있는 경우, 근로자는 퇴사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근로자의 급여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연말정산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근로자의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급여를 처음 지급하는 때에 퇴직자의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하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처음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교부합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37-200…]

Q2. 연도 중 이직하여 두 군데 이상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A2. 근무하던 직장(A)을 중도 퇴사하고 같은 해 다른 직장(B)에 재취업한 경우로서 근로자가 이전 근무지(A)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퇴사한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최종 근무지(B)에 제출하는 경우, 최종 원천징수의무자(B)는 이전 근무지(A)와 최종 근무지(B)의 근로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합니다.

최종 근무지(B)에서 연말정산 시 이전 근무지(A)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공제를 누락하였거나 연도 중에 퇴사하여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
 - ※ 다음연도 5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로 공제할 수 있으며, 홈택스를 이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전자신고하면 편리합니다.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신고서 > 경정청구 작성)
 - 제출서류 : ①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② (당초)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③ (당초)소득·세액공제신고서
 - ④ 관련증명서류

Q3. 2022년 중도퇴사 후 재입사시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나요?

A3. 해당과세기간에 중도퇴사 후 재입사 하시는 경우 현근무지에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하여 현근무지에서 종전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하시면 됩니다.

-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공제를 누락하였거나 연도 중에 퇴사하여 소득·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
 - ※ 다음연도 5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로 공제할 수 있으며, 홈택스를 이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전자신고하면 편리합니다.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신고서 > 경정청구 작성)
 - 제출서류 : ①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② (당초)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③ (당초)소득·세액공제신고서
 - ④ 관련증명서류

Q4. 부양가족 인적공제 적용시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기준에 퇴직소득이나 일용근로소득도 포함되나요?

A4.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의미하며 분리과세, 비과세 소득금액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퇴직소득이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적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분리과세 소득인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 소득 종류별 소득금액 요건 판단(비과세·분리과세 소득 제외)

구분	소득종류	소득금액	공제가능 요건
종합소득 (①)	금융소득	총수입금액	금융소득 합계액 2,000만 원 ¹⁾ 이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필요경비	필요경비 차감 후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	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 333만 원 ²⁾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 (개정) 201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로 소득요건 확대	
	연금소득	총연금액-연금소득공제	(공적연금) 총연금액 516만 원 ³⁾ 이하 (사적연금) 총연금액 1,200만 원 이하로 분리과세 선택
	기타소득	총수입금액-필요경비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로 분리과세 선택
퇴직소득(②)		퇴직금=퇴직소득금액	퇴직금 100만 원 이하
양도소득(③)		양도가액-필요경비-장기보유특별공제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차감 후 100만 원 이하
합계액			①~③ 합계액 100만 원 이하

- 1)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의 경우 종합소득 분리과세 대상
- 2) 근로소득금액 100만 원=총급여 333만 원-근로소득공제 233만 원
- 3) 연금소득금액 100만 원=총연금액 516만 원-연금소득공제 416만 원

Q5. 부양가족 중 암환자가 있는데 장애인 공제가 가능한가요?

A5.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여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담당의사를 경유하여 의료기관명 직인 및 경유한 의사의 서명 날인이 된 장애인 증명서를 의료기관으로부터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장애인공제시 증명서류 제출(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②)참고

-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으려는 때에는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장애인 증명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증명서·장애인등록증의 사본 그밖의 장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장애인증명서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증명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애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그 장애기간이 기재된 장애인 증명서 등을 이미 제출한 때에는 그 장애기간 동안은 다시 제출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장애기간 중 사용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는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이미 제출한 장애인증명서를 반환받아 이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Q6. 2021년에 의료비를 지출하고 2022년에 실손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언제 차감해야 하나요?

A6. 2021년에 의료비를 지출하고 2022년에 실손보험금을 수령하신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2021년 의료비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 의료비 지출연도와 실손보험금 수령연도가 달라 보험금 수령 후 종전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보험금을 수령한 연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까지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3호】

●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시 중점 확인사항

구 분	중점 확인사항
의료비 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비속 등의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함
	- 근로자 명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지출하였는지 확인
	• 사내근로복지기금·보험회사(실손보험금)·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를 제외하였는지 여부 확인(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하지 않은 의료비 공제 불가)

Q7. 회사를 다니기 전에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지출액이 있는데 연말정산 시 공제 가능한가요?

A7. 연말정산 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등 사용액, 주택관련 공제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 근로제공기간 동안의 지출액에 대해서만 공제되는 항목】

구 분	중점 확인사항
특별 소득공제	건강보험료 등(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주택자금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기타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근로자 주택마련 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 출자금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특별 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기타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 해당 과세기간 중 지출한 금액에 대해 공제 가능한 항목

- 기부금 세액공제
-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 연금계좌 세액공제
- 투자조합출자등 소득공제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Q8. 어머니에 대해 부양가족 공제를 A가 받고 B가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B는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A8. 의료비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을 위해 근로자가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가 가능한 것이므로 A가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하고 B가 의료비를 지출하시는 경우 둘 다 의료비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A는 의료비를 직접 지출하지 않았고 B는 기본공제 적용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의료비 과다공제 주요 사례

- 의료비 지출액 중 보험회사에서 보전받은 보험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님
 - 보험회사로부터 의료비의 일정액을 상해보험·단체보험 등 실손보험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의료비 지출액에서 수령한 보험금을 차감하고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아야 함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은 의료비 지원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님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는 본인부담금 상한제 사후환급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불가
 - 연간 보험적용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공단이 환급해주는 초과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불가(진료연도를 기준으로 판단)
- 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를 나누어 세액공제 불가(부모님을 부양하는 1명만 공제 가능)
 - 장남이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데, 차남이 부모님의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 차남이 지출한 의료비는 차남(부양요건 위배)과 장남(본인 지출 위배) 모두 세액공제 불가
- 간병비는 의료비 공제대상 아님

Q9.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근로자 명의로 차입한 경우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A9. 타인명의의 주택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차입한 경우라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 (개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오피스텔 제외)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보증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다음의 1), 2)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인 외국인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 2)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을 것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

- ①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일 것
- 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 (세대주 여부의 판정)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라 판단합니다.
- (실제거주 여부) 세대주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고, 세대주가 아닌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만 적용합니다.

Q10. 60세 미만이나 소득이 없는 부모님이 사용하신 신용카드 사용액을 근로자인 자녀가 공제 가능한가요?

A10. 부모님이 60세 미만에 해당하여 기본공제를 받지 못했더라도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이고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근로자인 자녀가 공제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의 소득금액과 나이의 제한을 받는 공제항목 비교]

구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③	기부금
	일반보장성 보험료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일반교육비 ^①	장애인 ^② 특수교육비		
나이	○	×	×	×	△	×	×
소득금액	○	○	×	○	×	○	○

(○: 제한을 받음, ×: 제한을 받지 않음)

- ① 직계존속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인 부양가족에게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 ②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지급하는 장애인특수교육비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장애인만 공제 됩니다.
- ③ 형제자매와 위탁아동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인 부양가족이 사용한 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 영세납세자를 위한 복지세정 -

01.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제도란?

- ◆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자의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1~4)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가구유형

2021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단독가구	배우자 ¹⁾ 와 부양자녀 ²⁾ , 70세 이상 직계존속 ³⁾ 이 모두 없는 가구
홀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 ⁴⁾ 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1)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2) 18 세 미만으로서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부양자녀
- 3) 70세 이상으로서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 상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일 것

*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질병 등 일시퇴거 포함)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없음

- 4) 총 급여액 등: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의 합계액

2. 소득요건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의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 기준금액|

구분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2,200만 원	3,200만 원	3,800만 원
자녀장려금	해당없음	4,000만 원	

- ▶ 근로소득 = 총급여액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 이자·종교인·배당·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 기타소득금액 = 총수입금액-필요경비

3. 재산 요건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6. 1.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 토지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임차보증금), 현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하며, 재산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 억 원 미만이면 장려금 산정금액의 50%만 지급합니다.

4. 기타요건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외국인 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포함)일 것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 거주자 (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 근로 · 자녀장려금 산정방법

- ◆ 가구 유형별 ‘총급여액 등’ 은 근로소득(총급여액)과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조정률) 및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을 말합니다.

- ◆ 총급여액을 ‘장려금산정표.’의 해당구간에 적용한 후, 감액요인(자녀세액 공제 등)을 반영하여 산정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1 및 11의2

- 장 려금 계산은 홈택스(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근로 · 자녀장려금
- 「재산해보기」(화면하단)에서 가능

◎ 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 ◆ 신청기간: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 1. ~ 5. 31. 까지 기한 후 신청: 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6. 1. ~ 11. 30.)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소득세 확정신고 기한 내에 신청했을 경우에 결정할 근로장려금의 100 분의 90 에 해당하

는 금액으로 결정

- 근로소득자는 반기별 소득기준으로 신청 가능하며, 반기신청한 경우 정기신청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습니다.

(상반기) 9. 1.~ 9. 15. (하반기) 다음 해 3. 1.~ 3. 15 .

- ◆ 신청방법: ① 인터넷 홈택스: www.hometax.go.kr,
②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③ ARS(자동응답전화): 1544-9944,
④ 신청도움 서비스: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여 신청 요청

◎ 근로 · 자녀장려금 지급 장려금 신청자에 대하여 자격요건 등 심사를 거쳐 9월 말에 지급됩니다. 반기별 신청 →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 → 결정 후 15일 이내 지급

◎ 허위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

- ◆ 근로(사업)소득 지급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신청하는 등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장려금 환수와 2년 또는 5년간 지급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및 지급

1. 반기별 지급 신청자격(2022년 귀속분)

-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소득 포함)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 2021년의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0. 6. 1.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 반기별 지급 및 정산

- ◆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소득귀속연도 다음연도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 반기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 또는 하반기 근로장려금 환급 시 정산할 때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산시 환급

◆ 상반기신청자는 상반기 총급여를 추정 연간근무월수로 환산하여 근로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 상반기총급여 + (상반기총급여 ÷ 근무월수) × 6
-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 상반기총급여 × 2

◆ 하반기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 액을 산정합니다.

〈2022년도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및 지급일정〉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2021년 하반기 소득분	2022. 3. 1.~2022. 3. 15.	2022년 6월 말	추가지급 또는 환수*
2022년 상반기 소득분	2022. 9. 1.~2022. 9. 15.	2022년 12월 말	산정액의 35%

* 2021년 상반기 기지급분과 하반기 신청분을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 Top10 - 장려금

Q1. 신청안내 대상인지 어디서 확인하고, 신청안내를 받지 못했지만 요건을 충족하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A1. 신청안내 대상인지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또는 ARS(1544-9944)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① 인터넷PC: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 자녀 장려금 > 신청안내대상 여부 조회
- ②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신청/제출 > 근로 · 자녀장려금 > 안내대상자여부 조회

신청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에 로그인 한 후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일반 신청하기(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 신청안내문의 발송

서면안내문은 우편으로 4월 말부터, 모바일안내문은 5월 2일부터 문자메시지, 카카오톡으로 발송하고 있으므로 발송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신청방법		대 상
홈택스 (인터넷)	간편신청	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신청안내자
	일반신청	요건을 갖춘 경우 누구나 신청
손택스(모바일)		요건을 갖춘 경우 누구나 신청
ARS(전화신청) ☎1544-9944		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신청안내자
서면 신청		요건을 갖춘 경우 누구나 신청
신청도움 서비스(대내화면)		요건을 갖춘 경우 누구나 신청

※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Q2. 신청서 접수 현황 및 신청 결과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2. 신청서 접수여부 및 신청결과는 신청인이 인터넷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또는 ARS(1544-9944)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려금 심사가 완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장려금 결정통지 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ARS를 통해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심사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의 장려금 진행사항 조회

【 홈택스 로그인 > MY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및 결정내역 】

● 근로·자녀장려금 결정·환급(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

근로·자녀장려금 결정 기한: 신청기한 지난 후 3개월 이내

결정 사실의 통지 및 환급: 근로·자녀장려금의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 2022년도 근로장려금 시기별 신청 및 환급일정

	신청기간	환급시기	지급액
2021년 하반기분	2022년 3월 1일 ~ 2022년 3월 15일	2022년 6월 중	추가지급 또는 환수*
2021년 정기분	2022년 5월 1일 ~ 2022년 5월 15일	2022년 8월 중	산정액
2022년 상반기분	2022년 9월 1일 ~ 2022년 9월 15일	2022년 12월 중	산정액의 35%

* 2021년 상반기 기지급분과 하반기 신청분을 정산하여 환급합니다

Q3. 1가구 내에서 둘 이상 거주자가 신청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A3. 1가구 내에서 둘 이상 거주자가 장려금을 신청한 때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정한 거주자 1명이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장려금 신청 순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7 ④)>

1. 해당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
2.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3.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4.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받은 사람

※ 가구 내 둘 이상의 거주자가 각각 정기신청 및 기한후신청을 한 경우 정기 신청을 한 거주자가 신청한 것으로 보고, 각각 반기신청 및 기한후신청을 한 경우 반기신청을 한 거주자가 신청한 것으로 봄.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의제(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⑦)

- ▶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도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 ▶ 상반기분 신청자 또는 하반기분 신청자는 반기 심사 후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해 6월 정산하드로 정기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정산으로 추가지급 또는 환수)
 - 상·하반기분 신청자: 정기신청을 할 수 없음
- ▶ 반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신청자의 의사에 따라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자녀 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 ▶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신청을 한 경우 그 신청자의 의사에 따라 정기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Q4. 이혼 후 친자녀는 전 배우자가 양육하고, 본인은 매달 양육비를 보내면, 친자녀는 누구의 부양자녀로 볼 수 있나요?

A4. 부양자녀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판정합니다.

<부양자녀가 있는 거주자 판단 순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5)>

1. 해당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
2. 해당 부양자녀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거주하는 사람
3.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4. 해당 부양자녀를 본인의 부양자녀로 하여 산정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5. 해당 부양자녀를 본인의 부양자녀로 하여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받은 사람

● 부양자녀란?

「민법」 또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서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인 자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합니다.

▶ 부양자녀의 요건(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4)

1. 거주자의 자녀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입양자일 것. 다만,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에는 거주자의 손자·손녀 또는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2. 18세 미만일 것.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것
4.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일 것. 다만,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Q5. 용역 등을 제공받은 곳에서 소득 증빙자료를 주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5. 사업자에게 소득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누리집에 해당 사실을 신고한 후 근로 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 국세청 신고 경로: 【국세청 누리집 > 국민소통 > 국세청100배 활용하기 가이드맵 >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시 첨부 서류

국세청에 수록된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자료와 실제의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일치한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자 또는 원천징수되는 인적용역자의 증거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증거자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7)

1.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
3. 그 밖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료

▶ 근로소득 또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증거자료(국세청 고시 제2017-30호)

1. 급여 또는 사업소득 지급대장 사본
2.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3.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4.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5.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

6.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확인서

※ 국세청 고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자료 고시」

[조회경로]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령⇒고시⇒ 장려세제운영

Q6.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은 장려금 지급의 소득요건 중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인가요?

A6.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은 장려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 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00조의6 ②)>

- ①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받은 근로 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②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 한 자) 로부터 지급받은 근로 소득
- ③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 ④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소득세법 제168조 제3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7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의 사업소득. 다만, 인적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받은 소득은 제외(원천징수대상 소득)
- ⑤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의 비교

구 분	총소득기준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	총급여액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구성 및 계산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 소득의 연간 합계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소득: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 기타소득: 총수입금액-필요경비 - 이자 · 배당 · 연금소득: 총수입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 소득의 연간 합계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소득: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활 용	- 근로 ·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 가구유형의 구분 - 근로 · 자녀장려금 산정 기준

Q7. 형편이 어려워 부모님 소유의 집에 살고 있는데 부모님의 주택과 재산을 포함하여 계산하나요?

A7. 종전에는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소유자가 직계존비속인 경우 거주자가 그 직계존비속과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은 거주자의 가구원에 해당하여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의 주택 등 재산을 포함하여 거주자의 재산요건을 판단하였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2년 5월 1일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정산하는 경우부터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 해당 직계존비속을 1세대 구성원에서 제외하되, 해당 주택의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을 기준시가 100%의 간주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 근로장려금의 신청 자격 중 재산요건은?

해당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일 것

▶ 1세대의 범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거주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구성하는 세대를 말한다.

1. 배우자
2.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3. 법 제100조의4제1항에 따른 부양자녀

Q8. 국세 체납이 있어도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나요?

A8.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직접세, 간접세 구분 없이 환급할 장려금의 30%를 한도로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국세 체납액 충당 후 환급하는 근로·자녀장려금 중 185만 원 이하에 대하여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 근로·자녀장려금의 산정·결정·환급 시 감액요건은?

▶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기한 후 신청(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체납액이 있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8)
환급할 장려금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그 체납액에 충당합니다

Q9. 동일주소에 거주하는 형제자매도 신청대상이 되나요?

A9. 형제자매 등은 동일주소에 거주하더라도 가구 구성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 재산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자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가구유형(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2021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단독가구	배우자1)와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홀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4)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1)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2) 18세 미만으로서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부양자녀
- 3) 70세 이상으로서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할것
 *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질병 등 일시퇴거 포함) 중증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4)은 연령 제한 없음
- 4) 총 급여액 등: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의 합계액

Q10.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받고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지급액이 감액되나요?

A10.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장려금 산정액에서 자녀세액공제액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자녀세액공제 감액은 자녀장려금에만 적용되며, 근로장려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자녀세액공제(소득세법 제59조의2)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로서 7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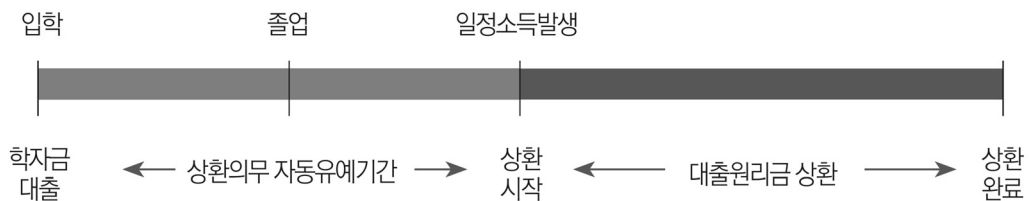
▶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의 비교

구 분	자녀세액공제	자녀장려금
기본공제대상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명인 경우: 연 15만 원 • 2명인 경우: 연 30만 원 • 3명 이상인 경우: 연 30만 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30만 원을 합한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 1인당 70만 원(최소 50만 원)
출산 · 입양 공제대상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째인 경우: 연 30만 원 • 둘째인 경우: 연 15만 원 •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 원 	

02.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란?

- ◆ 대학생이 재학 중 등록금을 대출받아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대출원리금은 소득 발생 후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는 제도
- 채무자는 대출시점부터 원리금상환의무를 부담하되,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할 때까지 상환의무 자동 유예됨



◎ 대출 및 상환 개요

◆ 대출대상자

- (학부) 교육부장관 또는 한국장학재단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 관한 협약을 맺은 대학에 재학 또는 입학예정인 학자금 지원 8구간(2022년 기준 가구 월소득 인정액 1,024만 원) 이하 가구의 대학생
 - 대출 당시 만 35세 이하
 - 신입생은 대학 입학허가 획득자, 재학생은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 * 장애인 학생의 경우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다자녀(3인 이상) 가구 학생은 소득구간에 관계없이 이용 가능
 - 교내외 장학금 및 대출을 받는 경우 이중수혜 금지

- (대학원) 교육부장관 또는 한국장학재단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 관한 협약을 맺은 대학원에 재학 또는 입학예정인 자로 학자금 지원 4구간(2022년 기준 가구 월소득인정액 461만 원) 이하 가구의 대학원생
 - 대출 당시 만 40세 이하

◆ 대출한도

- 학부
 - 등록금 소요액 전액 (한도없음)
 - 생활비 연간 300만 원(학기당 150만 원)
- 대학원
 - 등록금 소요액 전액(석사과정 6천만 원, 박사과정 9천만 원 한도)
- 석박사 통합과정 포함
 - 생활비 연간 300만 원(학기당 150만 원)

◆ 대출금리

- 교육부장관이 물가상승률, 실질금리 및 재원조달 금리 등을 고려하여 매학기 결정 고시
 - 2022년 1학기: 1.7%
 - * 2018년 1학기~2019년 2학기: 2.2%, 2020년 1학기: 2.0%, 2020년 2학기: 1.85%, 2021년 1학기~2학기: 1.7%

◆ 의무상환액

- 채무자의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상환율을 적용하여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함
 - 소득발생에 상관없이 채무자의 선택에 따른 자발적 상환은 한국장학재단에 납부(자발적 상환은 국세청에 납부 불가)

의무상환액 = (연간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1) × 상환율2 - 소득 귀속연도의 자발적상환액3)

1) 2022년 귀속 상환기준소득: 1,510만 원(총급여 기준 2,394만 원)

2) 상환율 : 20% 또는 25% ('22년까지는 20%로 일괄적용)

① 학부생 대출잔액만 있는 경우: 20%

② 대학원생 대출잔액만 있는 경우: 25%

③ 학부생 대출잔액과 대학원생 대출잔액이 모두 있는 경우: 25%

- 단, 25%를 적용하여 산정한 의무상환액이 대학원생 대출잔액보다 큰 경우는 20%를 적용

3) 소득 귀속연도에 채무자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으로 근로 · 사업소득에 따른 의무상환액을 한도로 함

☞ 상환기준소득은 매년 교육부 장관이 고시(2022년 귀속 상환기준소득은 2023년 통지 시 적용)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www.icl.go.kr) 『상환금 간편계산』 코너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최소부담 의무상환액

－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여 산출된 의무상환액이 36만 원 미만인 경우 36만 원 상환

※ 상속 · 증여재산에 의한 의무상환액은 최소부담 의무상환액 적용 제외

◎ 의무상환 방법

◆ 원천공제 대상자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보험모집인 · 방문판매원으로 연말정산하는 사업소득자

1. 매월 원천공제 납부

● 국세청이 전년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된 원천공제 대상 금액을 원천공제(7월~다음 해 6월)가 시작되기 전 채무자(5월) 및 고용주(6월)에게 각각 통지

－ 고용주는 채무자에게 급여지급 시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상환금 명세서에 의하여 상환내역을 신고 및 납부

2. 원천공제 미리 납부

● 국세청이 고용주에게 원천공제 대상자를 통지하기 전, 채무자가 원천공제 1년분 상환액을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미리 납부하면 고용주에게 원천공제 대상자로 통지되지 않음

－ 1년분 미리 납부: 5월 말까지 원천공제 통지액(1년분) 일시 납부

－ 분할납부: 50%는 5월 말까지, 나머지 50%는 11월 말까지 납부

※ 원천공제 통지액을 미리 납부(일시납 or 분납)하는 경우 채무자가 원천공제 대상자임을 회사에 통지하지 않음

3. 원천공제 개시 도중 잔여액 납부

● 매월 원천공제하여 납부하던 중이라도 원천공제 통지액에서 이미 납부된 상환액을 차감한 잔여액은 일시에 납부가능하며 잔여액 납부 시 고용주가 원천공제를 중단함

◆ 고지 · 납부 대상자

● 종합 · 양도소득 또는 상속 · 증여 재산이 발생한 경우 신고된 국세소득금액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계산하여 채무자에게 납부고지서 발송

－ 채무자는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만 하면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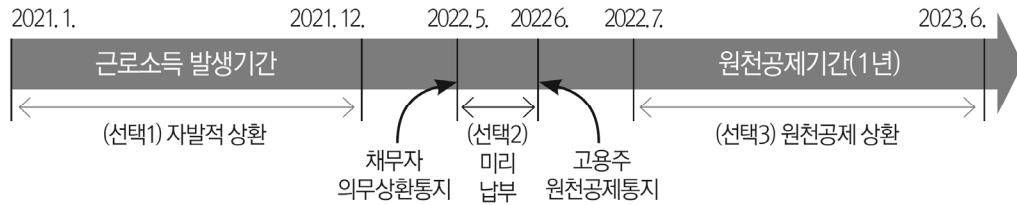
● 납부방법: 납부고지서의 가상계좌로 납부(은행창구 수납 안됨)

※ 납부가능시간: 평일 09:00~21:00 (토요일 · 일요일 · 공휴일 제외)

◆ 자율상환제

-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소득이 발생한 연도에 미리 자발적으로 상환하면 해당소득에 대한 의무상환액을 납부한 것으로 인정(2018. 3. 13.시행)

< 의무상환액 납부방법 선택 >



◎ 상담 및 문의

- ◆ 국세상담센터: ☎ 126번 ☞ 1번 '홈택스 상담' 선택 ☞ 4번 '학자금 상환' 선택

- ◆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www.icl.go.kr)

03. 1세대 1경차 유류비 지원

◎ 경차유류세 환급제도

1세대에 1경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유류구매카드' 로 연간 30만 원의 유류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유류구매카드' 는 신한 · 현대 · 롯데 카드사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승용 · 승합)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경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 ① 경형승용차 1대만 소유한 경우
- ② 경형승합차 1대만 소유한 경우
- ③ 경형승용차와 경형승합차 각 1대씩만 소유한 경우

- 다음의 경우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① 장애인 · 국가유공자 유류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② 법인 차량 또는 개인명의 단체 차량
- ③ 경형승용차 2대 이상 또는 경형승합차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 ④ 경형승용차와 다른 승용차 동시 소유
- ⑤ 경형승합차와 다른 승합차 동시 소유 등

◆ 유류구매카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 차량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을 구비하여 아래의 방법으로 카드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롯데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인터넷	www.lottecard.co.kr 누리집 → 카드 → 카드신청 → 제휴카드 → 복지/공공 → '경차smart롯데카드'	www.shinhancard.com 누리집 → 카드 → 신용카드 → 공공 / 단체 → '신한카드경차사랑 Life '	www.hyundaicard.com 누리집 → 카드안내 · 신청 → 제휴카드 → 공공 → '경차전용카드(유류세환급)'
전 화	1899-9955 → 카드신청 접수	080-800-0001 → 2번 경차사랑 간편 접수	1577-6982 → 1번 현대카드 경차전용카드
방 문 (본인)	롯데카드 영업점 및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신한카드 · 신한은행 영업점	

◆ 어떤 혜택을 받나요?

- 2023년까지 연간 30만 원의 한도 내 유류 결제금액에서 일정금액이 차감됩니다.
 - 신용카드: 결제금액에서 리터당 할인금액을 차감하고 청구
 - 체크카드: 결제금액에서 리터당 할인금액을 차감하고 통장 인출

◆ 주의할 사항은?

- 신용카드는 모든 물품을 구매할 수 있으나 유류세 혜택은 해당 경차의 연료 구매분에 제한됩니다.
-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경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등 부정사용 시 할인받은 세액과 40%의 가산세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04. 장애인 조세지원 제도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세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소득세 경감 혜택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직계비속이 장애인이고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포함)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계산할 때 다음과 같은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 기 본 공 제: 연령에 관계없이 1인당 연 150만 원 공제
- 장애인공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 원씩 추가 공제
- 보험료공제: 장애인 1인당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에 대하여 연간 100만 원까지 공제
- 의료비공제: 장애인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
- 교육비공제: 장애인의 재활교육에 드는 비용을 전액 공제
 - 세액공제: 각각 이 금액의 15%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비과세저축: 장애인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생계형 저축 중 1인당 저축원금이 3천만 원(2015. 1. 1. 이후 가입시 5천만 원) 이하까지는 소득세·지방소득세 소득분·농특세를 면제
 -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취학·취업이 곤란한 자)의 경우도 공제대상 (비과세저축은 제외)
 - ※ 보험료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만 해당되고 의료비공제와 교육비공제는 근로소득자와 일정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에게만 해당됨

◎ 증여세 경감 혜택

- ◆ 장애인이 증여받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 장애인이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을 증여받아 3개월 내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하는 경우에는 5억 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증여자가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여 위탁하는 경우 포함).
- 또한 장애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금으로서 연간 4천만 원까지의 보험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비과세합니다.

◎ 상속세 경감 혜택

- ◆ 상속인 또는 동거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인 1인당 1천만 원에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기대여명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합니다.

◎ 납부기한 등의 연장 혜택

- ◆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 등 장기 치료를 요하는 사유로 인하여 세금을 기한 내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세금납부를 연장합니다.

◎ 기타 간접적 세제 혜택

- ◆ 기부금 공제
- 개인이 장애인복지시설에 지급한 기부금 전액 공제(법인인 경우 소득금액의 10% 한도)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국내 공급 시)

- 「장애인 보조기기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 또는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 기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수입 시)

-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것으로서 장애인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물 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 개별소비세 면세

-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차

◆ 관세 감면

- 장애인용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 지방세 면세

-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자동차세 면제

05. 중소기업 조세지원 제도

세법 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기업에 비해 추가 세금지원 혜택이 주어집니다.

◎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지원 내용

구 분	지원내용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기업 등 5년간 법인세(소득세)의 50%~고용 증가 시 최대 100%를 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제조업 등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의 5~30%를 매년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 (최대 1억 원)
설비투자 지원	• 기계 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등에 투자시 투자금액의 10%, 신성장 사업 화 시설 12%,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16% 세액공제
지방이전 지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 공장이 지방으로 이전 시 7년(5년)간 법 인세(소득세) 면제, 그 후 3년(2년)간 50% 감면

최저한세 적용한도 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이 최소한 부담해야 하는 최저한세 적용기준을 일반 법인에 비해 3%~10% 포인트 우대 • 각종 감면적용 하기 전 과세표준 × 7%(일반법인 10%~17%) • 중소기업 졸업 시 유예기간 이후 3년간 8%, 그 이후 2년간 9%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 대체투자의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가능
결손금 소급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전사업연도에 납부한 세금 중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 만큼을 소급해서 환급 적용 가능(2021년 결손금은 직전 2개년도 적용)
접대비 인정범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대비 인정한도 (①+②) ① 기본금액: 3,600만 원(일반기업: 1,200만 원) ② 수입금액 × 적용율
구조조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간 통합 시 양도소득세 과세유예
원천징수 방법 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 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사업자는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반기(6개월)별로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 가능
고용유지·증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 유지시 임금감소액의 10%, 시간당임금 증가액 15% 세액공제 • 고용증가인원의 사회보험료 증가분 50~100% 세액공제 • 복직 ·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인건비의 30% 세액공제 • 정규직 전환 1인당 1천만 원 세액공제
기술이전 및 취득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등 이전 소득 50% 감면, 기술대여 소득 25% 감면
상생결제제도 이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생결제제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의 (0.15~0.5%) 10% 한도 (지급기한별) 세액 공제

※ 일부 규정은 중견기업에도 적용되나, 공제액 등은 다를 수 있음

◎ 일반기업과 같이 적용받는 세금지원 내용

구 분	지원내용
공장(본사) 지방이전에 대한 세금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장(본사) 이전연도와 그 후 9년(6년)간 세금감면 - 이전연도와 그 후 6년(4년)간 100%, 그 후 3년(2년)간 50% 감면
연구 · 인력 개발에 대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전연도 초과액의 25%(중견기업 40%, 중소기업 50%)와 해당연도 지출액의 0~2% (중견기업 8%, 중소기업 25%)*중 큰 금액 세액공제 * 중소기업 졸업시 유예기간 이후 3년간 15%, 그 후 2년간 10%, 중견기업 8% • 설비투자금액의 1%(중견기업 3%, 중소기업 7%)를 세액공제 • 신성장동력 연구개발비, 원천기술연구개발비 최대 30%(중소기업 최대 40%) 세액공제
농공단지 등 입주 기업에 대한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 후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소득세)의 50% 감면

시설투자에 대한 감면 (통합투자세액공제) §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등에 투자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공제) 투자금액의 1%(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 신성장 사업화 시설 3%(중견 기업 5%, 중소기업 12%),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6%(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 - (추가공제) 투자금액이 직전 3년간 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의 3%(국가전략기술 4%) (기본공제금액의 2배 한도) * 2021. 1. 1. 이후 과세표준 신고분부터 적용 (2020년, 2021년 투자분은 기존 투자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 중 선택 가능)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단기술 및 연구소 기업에 대하여 소득발생후 3년간 법인세(소득세) 100% 감면, 그 후 2년간 50% 감면 ※ 고용인원, 투자누계액과 연계하여 일정한도 내 공제
전자신고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방법으로 제출 시 1만 원~2만 원 세액공제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등에 대해 5년간 25%~100% 감면 ※ 고용인원, 투자누계액과 연계하여 일정한도 내 공제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자에게 위탁한 물류비 증가액의 3%(중소기업 5%) 세액공제
사회공헌사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 3년간 100% 감면, 이후 2년간 50% •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인정받은 기업 3년간 100% 감면, 이후 2년간 50%
근로소득 증대기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전 3년 평균 초과임금 증가분의 5%(중견기업 10%, 중소기업은 20%) 세액공제 •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 증가분의 5%(중견기업 10%, 중소기업 20%) 세액공제
고용 증대기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1인당 중소기업은 700~1,300만 원, 중소기업은 450~900만 원, 일반기업은 400~500만 원 세액공제

06. 납부기한 등의 연장 제도

◎ 사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세금납부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부에서는 사업자가 재해를 당하거나 거래처의 파업 등으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납부기한 등의 연장 제도를 통하여 일정기간 세금납부를 연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납부기한 등의 연장

◆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납부기한 등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등의 연장 신청: 「납부기한 등의 연장 승인신청서」를 납부기한 3일 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납부기한 등의 연장 기간: 기한만료일의 다음날부터 9개월 이내
- 고용재난지역,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은 기한만료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 한정)

◆ 납부기한 등의 연장 사유

- ①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 ②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 ④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
- ⑤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 ⑥ 금융회사 등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 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⑦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대리인 등이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 ⑧ ①~③항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 (대상자) 아래 요건 모두 충족

- ① 2021. 12. 31. 이전에 개인사업.을 모두 폐업하고
 -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포함 직전 3년 평균 총수입금액이 15억 원 미만
- ② 2020. 1. 1. ~ 2024. 12. 31. 기간 중, 개업 후 1개월 이상 계속 사업 또는 취업 후 3개월 이상 계속 근무
- ③ 신청일 현재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합계 체납액(가산금·납부지연가산세 제외) 5천만 원 이하

◆ (특례 내용) 가산금·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체납국세 분할납부(최대 5년) 허용

◆ (신청기간) 2020. 1. 1. ~ 2025. 12. 31.

- 납세자 보호 제도 -

01. 모범납세자 우대제도

◎ 세정상 우대혜택

세정상 우대혜택은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에게는 선정일로부터 3년간,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표창 수상자에게는 선정일로부터 2년간 제공합니다.

◆ 세무조사 유예

- 단, 객관적이고 명백한 조세포탈 행위 등이 있을 경우 우대혜택을 배제합니다.

◆ 납세담보제공 면제

- 기업의 자금 사정 악화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 등의 연장·납부 고지의 유예 및 압류·매각의 유예 시 체납 이력을 감안하여 조세일실 우려가 없는 경우 5억 원 한도 내에서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해 드립니다.

◆ 민원봉사실 전용창구 이용

-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설치된 모범납세자 전용 창구를 이용하여 민원접수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터 이용

- 인천공항에 설치된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터에서 간단한 사무 또는 휴식을 취하거나 납세지원 서비스 및 휴대용 통·번역기 대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회적 우대혜택

◆ 철도운임 할인

- 납세자의 날에 표창 등을 수상한 모범납세자에게 선정일로부터 1년간 업무목적으로 주중 철도 이용 시 최저 10%, 최대 30%의 운임할인을 제공합니다.

◆ 공항 출입국 우대

- 적격심사를 통과한 모범납세자에게 정부포상·기획재정부 장관 표창 수상자는 3년간, 국세청

장·지방청장 표창 수상자는 2년간 공항 출입국 우대심사대 등을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합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및 국립공원 주차장 무료 이용

- 국세청장이 배부한 모범납세자 스티커 부착차량은 선정일로부터 1년간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 신용보증기금 보증심사 시 우대

- 신용보증기금 보증심사 시 한도 우대(30억 원), 보증료율 0.2%p 인하 및 보증비율 최대 90% 우대합니다(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에게 3년간).

◆ 보증지원우대

-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의 이행보증 보험료 10% 인하, 보증한도 10~30억 원 확대, 맞춤형 신용관리 서비스 무상지원 혜택을 제공합니다(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에게 3년간).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료 10% 인하, 보증한도 최대 50억 확대 혜택을 제공합니다(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에게 3년간).

◆ 국방부 물품·용역 적격 심사 시 가점 부여(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에게 3년간)

◆ 방위사업청 물품·장비정비용역 적격심사 시 가점 부여(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에게 2년간)

◆ 대출금리 경감, 금융수수료 면제 등 금융상 우대

- 신한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 부산·경남·제주은행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모범납세자의 자금운용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대상 훈격과 우대기간 및 우대 내용은 은행별로 다르므로 이용 전 문의 필요).

◆ 의료비 할인혜택

- 강동경희대병원, 일산백병원, 을지대학병원, 부산 동의의료원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대상 훈격과 우대기간 및 우대 내용은 의료기관별로 다르므로 이용 전 문의 필요).

◆ 콘도 요금 할인 혜택(소속 임직원 포함하여 제공)

- 소노인터내셔널(舊대명리조트)이 보유하고 있는 전국 모든 콘도·호텔을 비수기(콘도별 성수

기를 제외)에 준회원 수준의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에게 3년간).

◆ 전용 신용카드 발급(모든 수상자 및 소속 임직원에게 제공)

- 주유, 의료 등에서 특별 혜택이 제공되는 신한카드 발급(선정일로부터 3년간)

02. 세금포인트 제도

◎ 세금포인트 제도란?

◆ 세금 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개인 또는 법인(중소기업)이 납부한 세금(소득세·법인세)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세금포인트 부여

구 분	개 인	법 인
대상	모든 개인납세자	조특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
부여대상 세목	종합소득 · 양도소득세 및 원천징수되는 근로 · 퇴직 · 사업 · 기타소득세	법인세 및 법인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부여시점	2000. 1. 1. 이후 연도부터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부여	2012. 1. 1. 이후 연도부터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부여
누적관리기간	2000년부터 누적 부여(소멸제도 없음)	최근 5년 동안 부여(6년 이전 납부실적 소멸)
부여기준	신고 · 자납세액 10만 원 당 1점 (고지납부 0.3점)	신고 · 자납세액 10만 원 당 1점 (고지분 제외)

◎ 세금포인트 조회 및 사용방법 확인

◆ 국세청 홈택스(PC) · 손택스(모바일 앱)에 로그인하여 세금포인트를 조회하거나 사용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홈택스 · 손택스 → 로그인 → 「조회/발급」 → 「세금포인트 혜택」

◎ 세금포인트 사용혜택

구 분	상 세 내 용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부기한 등의 연장 등 신청 시 납세담보면제(개인 · 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세유예 신청 시 최대 5억 원까지 납세담보 면제 * 담보면제 신청금액 = 세금포인트 × 10만 원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액채납자 재산 매각유예(개인 · 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천만 원 이하 소액채납자 재산 매각유예 * 매각유예 신청금액 = 세금포인트 × 10만 원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 · 휴식 공간 및 납세지원 서비스 제공(5P 사용)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세자세법교실 우선 수강(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운영하는 납세자세법교실 우선 수강(3P 사용)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쇼핑몰(개인 · 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을 5% 할인 구매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중앙박물관 관람료 할인(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 · 특별전 관람료 10% 할인 제공(3p 사용)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재중수목원 ·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입장료 할인(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수목원 입장료 20% 할인 제공(3p 사용)

◎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쇼핑몰 소개

◆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중소기업 제품을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 사용 전용 온라인 쇼핑몰

◆ 구매금액별 사용포인트 및 할인율

구매금액	10만 원 이하	10~20만 원	20~30만 원	30~40만 원	40만 원 초과
사용포인트	1P	2P	3P	4P	5P
할인율	5%				

◆ 쇼핑몰 접근경로

※ 국세청 홈택스(PC) · 손택스(모바일 앱) → 로그인 → 「조회/발급」
→ 「세금포인트 할인쇼핑몰」 안내 화면에서 입장하기 클릭

03. 국선대리인 제도

경제적 사정 등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영세 납세자가
청구세액 3천만 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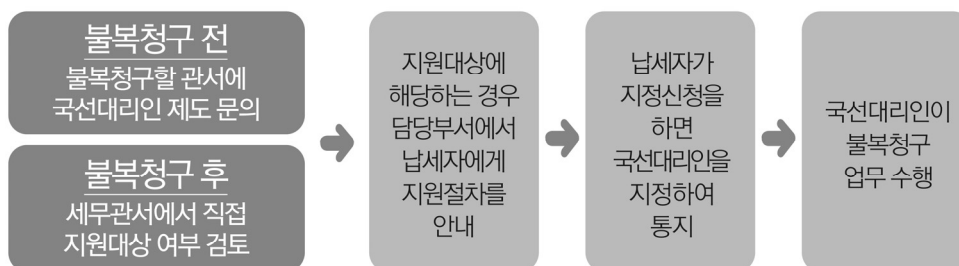
- ◆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세액 3천만 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서 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이고 소유재산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납세자, 상속세 · 증여세 · 종합부동산세는 제외

◎ 국선대리인은 누구?

- ◆ 국선대리인은 지식기부(무보수)에 참여한 세무사 · 공인회계사 · 변호사를 말하며 각급 세무관서별로 위촉합니다.
- ◆ 국선대리인은 영세납세자를 위하여 무료로 법령검토 ·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청구 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 국선대리인 지원 절차



◎ 국선대리인 담당부서

- ◆ 과세전적부심사: 세무서 · 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
※ 국세청에 청구한 경우 국세청 심사2담당관실

- ◆ 이의신청: 세무서 · 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

◆ 심사청구: 국세청 심사2담당관실

04.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가
세금에 대한 고민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나눔 세무사 · 회계사>가
사업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세금문제 해결을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 영세납세자지원단

- ◆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개인사업자, 영세중소법인, 사회적 경제기업, 장애인 사업장이 지원 대상입니다.
- ◆ 전국 모든 세무서에 설치되어 있으며, 납세자보호담당관(지원단장), 업무관리 담당자, 영세납세자 권익보호에 헌신적으로 봉사할 <나눔 세무사 · 회계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신청방법

- ◆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문의는 국번없이 126 → 3번)
- ◆ 국세청 홈페이지(www.hometax.go.kr) → 상담/제보 → 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 신청/관리

◎ 제공되는 서비스

- ◆ 무료세무자문 서비스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영세 개인사업자 등에게 세금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 세무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 창업자 멘토링 서비스
신규(예비) 창업자 등에게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법인세 정기신고 시까지 1:1 맞춤형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 찾아가는 서비스
전통시장, 다문화센터, 창업보육센터 등 영세납세자의 상담 수요가 밀집한 곳을 영세 납세자

지원단이 방문하여 세무상담 및 신고지원(신고 대리 서비스 제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폐업자 멘토링 서비스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 등에게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법인세 정기신고 시까지 1:1 맞춤형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05. 납세자권리현장

납세자의 권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존중되고 보장됩니다

◎ 납세자권리현장

납세자는 신고 등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조세탈루 혐의가 없는 한 성실하다고 추정되고 법령에 의해서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며, 공정한 과세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과 범위에서 조사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증거인멸의 우려 등이 없는 한 세무조사 기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받으며, 사업의 어려움으로 불가피한 때에는 조사의 연기를 요구하여 그 결과를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명백한 조세탈루혐의 등이 없는 한 중복조사를 받지 아니하며, 장부·서류는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납세자의 동의가 있어야 세무관서에 일시 보관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세무조사 기간이 연장 또는 중지되거나 조사범위가 확대될 때, 그리고 조사가 끝났을 때 그 사유와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절차로 권익을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을 때 그 처분의 적법성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며, 납세자보호담당관과 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자신의 과세정보에 대해 비밀을 보호받고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공무원으로부터 언제나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06. 납세자보호위원회

◎ 「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란?

- ◆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국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 권익보호 사안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해 세무서, 지방국세청 및 국세청에 설치된 기구입니다.

◆ 심의 대상

구분	세무서 · 지방국세청 위원회	국세청 위원회
세 무 조 사 분 야	① 위법 · 부당한 세무조사 및 세무공무원의 위법 · 부당한 행위	재심의 ①②③
	② 중소규모납세자* 외 납세자의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범위확대 승인	
	③ 중소규모납세자의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범위확대에 대한 이의 제기	
	④ 세무조사 시 장부 등의 일시보관 기간연장	-
일 반 국 세 행 정 분 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내용 확인 절차 미준수 • 무리한 현장확인 및 과도한 자료요구 • 고충민원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

*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 100억 원 미만 납세자(가장 큰 과세기간 기준)

◎ 위원회 구성 및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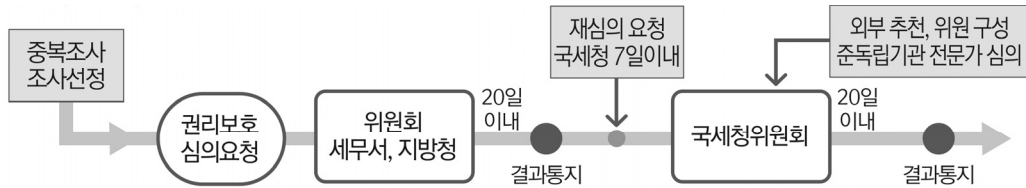
-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제외한 모든 위원이 조세 · 법률 · 회계분야에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소속 위원들은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민원인, 조사대상자 등에 대한 과세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고, 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절차

◆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세무서 · 지방국세청	국세청
심의 요청	세무조사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결정 통지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심의 절차



07. 납세자보호담당관

◎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란?

◆ 세금의 부과·징수 그리고 조사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 있는 납세자의 억울함을 해결하고 납세자 불만을 적극적으로 해소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국세전문 옴부즈맨(ombudsman)제도를 말합니다.

◆ 조사 부서와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 세무조사가 세법에 따라 공정·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청탁이 없는 깨끗한 조사 환경 조성을 위한 예방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전국 세무관서(국변없이 126 → 3번)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역할은?

◆ 국세의 부과·징수과정에서 국세공무원이 위법·부당한 권한 행사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잘못된 경우 시정해 드립니다.

◆ 부과된 세금 때문에 고민이 있으십니까?

• 친절하고 자세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 세무조사 진행과정에서 조사공무원이 부당한 권한행사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조사진행과정을 확인하여 잘못된 경우 즉시 조치해 드립니다.

◆ 세무조사결과 통지 내용에 불만사항이 있으십니까?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시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해 드립니다.

◆ 세금이 잘못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시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세금이 잘못 부과된 경우 바로 잡아드립니다.

08. 납세자권리보호요청 제도

◎ 권리보호요청 제도란?

- ◆ 세무관서장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국세행정 집행(예정)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하는 제도입니다(2009. 10. 26. 시행).

◎ 권리보호요청 대상은?

◆ 세무조사 관련 권리보호요청 대상 예시

1. 세법 · 같은 법 시행령 · 같은 법 시행규칙에 명백히 위반되는 조사(「국세기본법」 제81조의 18제2항제4호에 따른 위법한 세무조사를 포함)
2.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등 법령이 정하는 구체적 사유 없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국세기본법」 제81조의18제2항제4호에 따른 부당한 세무조사를 포함)
3.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제2항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범위확대에 대해 세무조사 일시중지 및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세무조사 중인 국세공무원의 위법 · 부당한 행위
 - 가. 조사 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 세액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
 - 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사대상 과세기간 · 세목 등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 또는 중지하는 행위
 - 다. 납세자 또는 권한 있는 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장부 · 서류 · 증빙 등을 열람 · 복사하거나 일시보관하는 행위
 - 라.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금품 · 향응 또는 업무집행과 직접 관련 없는 사적편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마.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관련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바. 조사중지 기간 중 납세자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 등의 검사 · 조사 또는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

5. 기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6. 납세자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 일반 국세행정 관련 권리보호요청 대상 예시

1. 소명자료 제출 · 고충민원 · 불복청구 · 체납세액 완납 등의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그에 필요한 결정취소 · 환급 · 압류해제 등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
2. 사전예고(독촉) 없이 재산을 압류하거나 소명안내 없이 과세자료에 의한 고지처분을 진행하는 행위(관련 법령 또는 규정에 의한 경우 제외)
3. 납세자가 권리구제 등의 필요에 의해 본인의 과세정보에 대해 열람 또는 제공 요구를 한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공을 지연하는 행위
4.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금품 · 향응 또는 업무집행과 직접 관련 없는 사적편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5.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관련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6. 과세자료 처리 등에 있어 세금의 부과 · 징수와 관련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납세자가 이미 제출 또는 소명한 자료 등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행위
7. 과세자료 처리 시 납세자가 해명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처리를 지연하는 행위
8. 신고내용 확인에 대한 적법 절차를 미준수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
9. 현장확인 시 출장 목적과 관련 없이 무리하게 장부 · 서류 등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위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 권리보호요청과 납세자보호위원회, 납세자보호 담당관의 권한

◆ 납세자의 권리보호요청이 접수되면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적절한 권한을 행사하여 시정조치를 취합니다.

◆ 세무조사와 관련된 권리보호요청은 관할 세무관서장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고

- ◆ 납세자는 관할 세무관서장의 결정에 대해 7일(7일이 경과하기 전에 세무조사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그 결정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09. 억울한 세금의 권리구제 절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 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 행정소송

◆ 행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

- 고충민원 신청

◎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 ◆ 세무서·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업무감사 및 세무조사 파생자료 등에 의한 과세예고통지를 받았을 때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세무서·지방국세청에 과세예고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 청구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등에는 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 청구서가 접수되면 해당 세무서·지방국세청·국세청에서는 접수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해 드립니다.

◎ 이의신청

- ◆ 납세고지를 받은 날 또는 세금부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고지한 세무서 또는 소관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세무서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소관 지방국세청에 이의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합니다. 다만, 이의신청인이 당초 결정기간 (30일)내에 항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해 드립니다.

◎ 심사 · 심판청구

- ◆ 납세고지를 받은 날 또는 세금부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 결정기간 내에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결정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 또는 심판청구 가능)

※ 심사청구서 및 심판청구서는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 심사 · 심판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해 드립니다.

◎ 행정소송

- ◆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에 의해 권리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세무관서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 고충민원

- ◆ 세법을 잘 알지 못하고,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불복청구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 제도입니다.



「2022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 기획재정부 -

□ 기획재정부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였다.

* '97년도부터 매년 2회(1월, 7월)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등을 정리·발간하여 지자체,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비치

-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157건의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하였다.
- 저성장·양극화 극복을 위한 민생안정대책을 다양한 분야에서 제시하는 한편,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대응한 행정 인프라 구축, 제도 개편 내용 등도 담고 있다.

□ 분야별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세제·금융>

- 고유가 상황 지속에 따른 국민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를 법정 최대한도(탄력세를 기준 37%)로 인하('22.7.1.~'22.12.31.)

* 유류세 30% 대비 추가 인하폭(부가가치세 포함, 원/ℓ) :

(휘발유) △57(247→304), (경유) △38(174→212), (LPG) △12(61→73)

- 코로나19 피해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 시행('22.10.1.)

* 최대 30조원 규모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가칭)'을 설립하여 대출채권 매입 등의 방식으로 상환일정 조정 및 채무감면 지원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서는 현행 60~70% 수준*인 LTV 상한을 주택소재지역·주택가격·소득과 상관없이 80%로 완화('22.3분기 중)

* (투기·투기과열지구) 60%, (조정대상지역) 70%

<교육·보육·가족>

- 인공지능의 교육적 활용 확대와 윤리적 이슈에 대비하여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 마련('22 하반기)
- '09년 2학기~'12년 2학기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출자를 대상으로 저금리 전환대출 시행*('22.7.6.~'24.12.)
 - * (현재) 평균 4.9% (5.8%~3.9%) → (변경) 2.9%
-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대해 자녀 1명당 월 20만원씩 6개월간 아동양육비 지원('22.7월~12월)
 - *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 청소년으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

<보건·복지·고용>

- 농작업 재해 보장 강화를 위해 농업인 안전보험의 보장 한도를 확대*하는 한편, 유족급여금과 장해급여금은 기존의 일시금 방식 외에 연금 방식으로도 지급('22.10.1.~)
 - * (일반 1·2·3형) 상해질병치료금 한도: 1천만원 → 5천만원
 - (일반 2·3형) 휴업급여금 (4일 이상 입원시, 120일 한도): 2~3만원/일 → 6만원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사업중단·실직·휴직 사유의 납부예외자가 보험료 납부 재개시 연금보험료의 50%(월 최대 45천원, 최대 12개월) 지원('22.7월~)
-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건설현장 포함)에 대해서는 휴게시설 설치 및 설치·관리기준 준수 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22.8.18.~)
 - * (규모) 향후 대통령령으로 지정 예정
 - ** (과태료) 1,000(설치·관리기준 미준수시), 1,500만원(휴게시설 미설치시) 이하

<문화·체육·관광>

- 디지털화에 대응하여 문화재데이터 및 지능정보기술 활성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 수립 및 시행('22.7.19.~)

<환경·기상>

- 국가 주요 계획·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후변화로 인해 받는 영향을 평가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 시행('22.9.25.~)
 - * 에너지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 도시개발, 수자원, 산지, 항만, 하천 등 대상
- 환경표지 인증 관련, 일반 인증보다 엄격한 환경성 기준을 적용한 프리미엄 인증 대상 제품군* 확대 및 생활밀착형 제품군**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기준을 신설('22.7월~)

- * 노트북, 모니터, 주방용·세탁용 세제, 샴푸·린스 및 바디워시, 의류 제품군 등
- ** 텀블러, 다화용기 대여 서비스 등
- 온실가스 감축 여부에 따른 전국 3,500여개 읍·면·동별 미래 기후변화 전망정보*를 기후 정보포털을 통해 제공('22.12월~)
- * (제공요소) 기후요소 4종(평균/최고/최저기온, 강수량), 극한기후지수 27종(폭염, 여름일수 등), 부문별 기후변화 영향정보 8종(냉난방도일, 건조지수 등)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공급망 안정화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22.8.4.~)
- * (투자) 인허가·인프라 등 패키지, (인력) 계약학과·특성화대학 등, (기술) 특화R&D+특례 지원
- 소규모 정보통신공사사업자의 시장참여 확대를 위해 대기업공사사업자 기준 및 도급 공사금액 하한(10억원) 신설('22.7월)

<농림·수산·식품>

- 농지 임대차계약 체결·변경·해제와 농지 내 농막 등 농축산물 생산시설 신규 설치 시 농지대장 변경신청 의무화('22.8.18.~)
- 기존에는 개별 사업체가 담당하던 항만 안전관리를 항만하역사업자가 항만사업장별로 총괄* 하도록 의무화('22.8.4.~)
- * 항만에 출입하는 모든 근로자 대상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교육 의무화 등

<국방·병무>

- 장병 1인당 1일 기본급식비 단가 인상(11,000 → 13,000원, '22.7월~)
- 입영을 앞둔 청년들이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확대 운영
- * (기존) 서울·대구·광주·대전에서 센터 운영 → ('22.7) 부산·춘천에도 센터 신설

<행정·안전·질서>

- 신분확인이 필요할 때,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시행('22.7.12.~)
-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진, 발급일자, 주민등록 관할 지방자치단체
- 현행 서면으로만 처리되는 청원을 온라인으로도 신청·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청원 서비스를 개시하는 한편,
- 법령 제·개정이나 공공시설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개

청원 도입('22.12.23.~)

- 운전자에게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된 무신호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 없이 일시정지 의무 부과('22.7.12.~)
- 이 책자는 7월 초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2,000여권이 배포·비치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 예정입니다.
- 6월 30일(목) 10:00부터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 게재되어 열람 또는 다운받을 수 있으며,
- 7월 초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
(<http://whatsnew.moef.go.kr>)에서 빠른 검색과 전화연결이 가능하다.
*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기기에서 최적화되어 보이는 웹페이지
- 특히, 삽화로 제작된 주요 제도와 정책은 기획재정부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 SNS를 통해 발간 전 미리 공개함으로써,
- 다양한 정부정책이 국민에게 한층 더 가깝고 친숙하게 전달될 것으로 기대한다.

- 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일부 발췌)

〈기획재정부〉

■ 유류세 인하폭 37%로 확대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휘발유, 경유, 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인하폭이 기존 30%에서 7%p 증가한 37%로 확대됩니다.

('22.7.1. 개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시행)

■ 고유가 상황 지속에 따른 서민자영업자분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물가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유류세 인하폭을 대통령령으로 가능한 최대폭까지 확대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기존 유류세 30% 인하와 대비하여, 휘발유는 57원/ℓ, 경유는 38원/ℓ, LPG부탄은 12원/ℓ의 추가적인 인하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 포함).

- 추진배경 : 고유가 상황 지속에 따른 서민·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 완화, 물가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유류세 인하폭을 대통령령으로 가능한 최대폭(탄력세율 기준 37%)까지 확대
- 주요내용 :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유류세 인하폭을 기존 30%에서 37%로 확대
- 시행일 : 2022년 7월 1일

■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한도 확대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가 10%p 상향됩니다.

- 연 매출 2억원 이하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는 매입세액 계산 시 매출액의 65%까지 매입세액을 인정받고 있으나, 10%p 상향 시 75%까지 매입세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7월 1일 이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 식품제조업계 및 외식업계의 재료비 부담 경감
- 주요내용
 -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10%p 상향 조정

구분	년과세표준	기본	우대 공제한도(~'23.12.31)	
			음식점업	그 외
개인사업자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50%	65% → 75%	55% → 65%
	2~4억원		60% → 70%	
	4억원 초과	40%	50% → 60%	45% → 55%
법인사업자		30%	40% → 50%	

- 시행일 : 2022년 7월 1일

■ 단순가공식료품 등 부가가치세 면제 한시적 확대

그간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어 공급한 경우 과세된 김치, 간장, 단무지 등 기초식자재와 수입시 과세된 커피 생두와 코코아두 등을 물가 안정을 위해 '23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세로 전환합니다.

- '22년 7월부터 '23년말까지 플라스틱, 알루미늄 파우치 등으로 개별포장되어 판매되는 김치,

간장, 단무지, 간장 등을 부가가치세 없이 구매할 수 있습니다.

■ 또한, '23년말까지 커피·코코아원두(단, 볶은 것 제외)도 부가가치세 없이 수입할 수 있습니다.

- 추진배경 : 생활·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수입원가 및 식재료비 경감 추진
- 주요내용
 -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병·캔 등 개별포장된 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를 '23년까지 면제
 - * 데친 채소류감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개장두부매주간장탄장고추장
 - (수입품 부가가치세 면제) 볶은 것을 제외한 커피·코코아두 수입시 부가가치세를 '23년까지 면제
- 시행일
 - (단순가공식료품 면제 확대) : 2022년 7월 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 (수입품 부가가치세 면제) : 2022년 6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한 날 이후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기간 연장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기간이 2022년 6월 30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6개월간 연장됩니다.

■ 이에 따라, 금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출고되거나 수입신고된 승용차에 대하여는 법정 개별소비세율에서 30% 인하(5→ 3.5%)된 탄력세율이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 소비자의 납세부담 경감 및 자동차 판매확대 등 내수 진작을 통한 경기 활성화 유도
- 주요내용
 -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 6개월 연장('22.6.30. → 12.31.)
 - '22.12.31.까지 제조장에서 출고되거나 수입신고된 차량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율 30% 인하(5→ 3.5%)
- 시행일 2022년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2022년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개인사업자가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총수입금액, 면세공급가액 포함)이 2억원 이상인 자'로 확대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총수입금액, 면세공급가액 포함)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2022년 7월 1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2020년 12월 23일 발표) 지원을 위한 소득정보 인프라 구축 및 세원투명성 제고
- 주요내용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개인사업자를 직전연도 사업장별 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한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총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사업자에서 2억원 이상인 사업자로 확대
 - * 2021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2억원 이상 여부를 판단
- 시행일 : 2022년 7월 1일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도입

2022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총수입금액, 면세공급가액 포함)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공제금액은 발급건수 당 200원이며, 연간 100만원 한도로 적용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7월 1일 이후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주요내용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공제대상) 직전연도 사업장별 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한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

(총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 (공제금액) 발급건수 당 200원
- (공제한도) 연간 100만원
- (적용기한) 2022년 7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 2022년 7월 1일 이후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 시행일 : 2022년 7월 1일

〈관세청〉

■ 시내보세판매장(면세점) 국산품 온라인 해외 판매 도입

코로나19 상황에서 외국인이 한국 방문 없이 국산품을 시내보세판매장(면세점) 운영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보세판매장의 새로운 매출처를 확보하고 국산품 판매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 코로나19가 정상화되면 관광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방한 외국인에 한해 귀국 후 일정기간 내 판매하는 형태로 전환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 (성과 평가) 6개월 마다 운영상황을 분석

▣ 동 제도 시행을 위한 운영 지침은 2022년 3월 23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보세판매장 업체는 플랫폼 개발, 판매국가물품 선정, 해외배송 계약 등 관련 인프라를 구축한 후 업체별로 7월 이후 사업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 추진배경 : 보세판매장(면세점) 업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제 관광수요 회복 지연으로 '20년 이후 경영위기 상황 지속

- 주요내용 :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해외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내보세판매장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국산품 판매(해외 배송) 허용

- 시행일 : 2022년 3월 23일

(업체별 온라인 해외판매 인프라 구축 후 7월 이후 사업 시행)

■ 해외직구 물품 '구매대행업자 등록제' 본격 시행

2022년 7월 1일부터 전자상거래 물품 구매대행업자 등록제가 1년간의 등록 유예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됩니다.

▣ 해외직구 물품을 구매대행해 수입할 경우 세관신고서에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를 기입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미리 세관에 등록을 하여 등록부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등록대상은 ①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하고 ②직전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물품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미만이라도 등록을 희망할 경우 신청 가능

- 추진배경 :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국내 소비자 보호 및 통관적 법성 확립
- 주요내용
 - (신청방법) 수입통관 실적이 가장 많은 통관지 세관에 신청서와 첨부서류* 제출
 - * 통신판매업 신고증 사본, 국세납세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 (제출방법) 방문, 우편, 전자메일, 팩스
 - (등록 유효기간) 3년
 - (미등록 시)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시행일 : 2022년 7월 1일

〈금융위원회〉

■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도입

코로나19 피해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시행됩니다.

※ 최대 30조원 규모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가칭)'을 설립하여 대출채권 매입 등의 방식으로 상환 일정 조정 및 채무감면 지원

▣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중 부실이 발생(90일 이상 장기연체)했거나, 부실발생 우려가 있는 차주가 지원대상이며, 장기간 나누어 갚을 수 있도록 거치기간 부여, 장기분할 상환 대출 전환 등 상환일정을 조정하고, 금리도 감면합니다.

- 부실차주가 보유한 신용채무는 상환여력에 맞추어 60~90%의 원금감면 조치도 함께 지원됩니다.

■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차주는 금년 10월부터 향후 3년간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무조정 신청방법 등은 별도 발표)

- 추진배경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 도입
- 주요내용 :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중 부실이 발생했거나 부실발생 우려가 있는 차주를 대상으로 상환일정 조정, 금리감면, 원금감면 지원
- 시행일 : 2022년 10월 1일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LTV 완화

2022년 3분기 중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비율(LTV) 상한이 완화됩니다.

■ 현행 60~70% 수준*인 LTV 상한이 주택 소재지역주택가격소득과 상관없이 80%로 완화됩니다.

* (투기투기과열지구) 60% (조정대상지역) 70%

- 추진배경 : 단기간 내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도입했던 대출규제의 정상화를 추진하여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 형성을 지원
- 주요내용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LTV 완화를 우선 추진
- 시행일 : 2022년 3분기 중

■ DSR 산정시 장래소득 반영폭 확대

2022년 3분기 중 현재 소득수준이 낮은 청년층 대출이 과도하게 제약되지 않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 비율(DSR) 산정시 장래소득 반영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보다 실질적인 소득흐름을 반영*하도록 미래소득 계산방식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 (現)대출시와 만기시점간 평균 → (改) ① 대출시~만기시점까지의 각 연령대별 소득흐름의 평균, ② 장래 소득 산출시 차주가 유리한 만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 추진배경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상 LTV 완화와 연계하여, 청년층 대출이 과도히 제약되지 않도록 DSR 산정방식 합리화
- 주요내용 : DSR 산정시 장래소득 반영폭을 확대(구체적 방안 등 추후 발표 예정)
- 시행일 : 2022년 3분기 중

■ 차주별 DSR 3단계 시행

2022년 7월 1일부터 차주별 DSR 3단계가 시행됩니다.

- 총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 비율)이 40%(은행)50%(비은행) 이내인 범위 내에서 신규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세대출, 중도금대출, 소액 신용대출 등 DSR 적용 예외대출은 제외

- 추진배경 : 상환능력 중심 대출관행의 확고한 정착을 유도하여 과도한 대출로부터 차주를 보호하고, 가계부채 리스크를 관리
- 주요내용 : 총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에 대해 DSR 규제를 적용
- 시행일 : 2022년 7월 1일

■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시행

2022년 하반기부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정상영업 회복 및 사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3.25조원 규모의 특례보증 프로그램이 시행됩니다.

- 포스트코로나 대비 특례보증은 향후 소상공인들이 외부여건 변화에도 영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자생력 강화를 지원하는 자금공급 프로그램입니다.
- 코로나 장기화로 대출감소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기업당 1억원(잠정) 한도 내에서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을 지원하며, 보증료 차감·심사요건 완화 등 우대사항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 추진배경 : 포스트 코로나 대비 정상영업 회복 및 사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 추진
- 주요내용

-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3.25조원 규모의 특례보증 공급
 - (자금용도)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 (지원한도) 기업당 1억원(잠정) / (보증방식) 직접보증
 - (우대사항) 보증료 차감, 심사요건 완화 등

●시행일 : 2022년 하반기 시행

■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보증 지원 실시

불법사금융 피해가 우려되는 최저신용자를 위한 특례보증 지원을 실시합니다.

▣ 금리상승 등으로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의 불법사금융 이용에 따른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백만원 이하인 분들 중 기존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이번 특례보증은 '22.10월 중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을 통해 은행, 저축은행 등에서 공급할 예정입니다.

- 지원대상 :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자로 기존 정책서민금융 상품 이용이 어려운 자
- 대출심사 : 금융정보 위주의 상환능력을 주로 심사하는 일반 금융상품과 달리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상환의지 등을 심사에 반영할 예정
- 자금용도 : 자금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긴급자금일반생활비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지원
- 대출한도 : 최대 1천만원
- 상환방식 : 3년 또는 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거치기간 최대 1년,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대출금리 : 연 15.9%를 기본으로 성실상환 시 매년 인하* 예정
 - * 매년 3.0%p 인하(대출기간 3년) / 매년 1.5%p 인하(대출기간 5년)
- 시행일 : 2022년 10월 중

■ 상장사 등록 감사인의 의무 위반 시 불이익 조치 마련

상장사 등록 감사인이 등록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시정권고 및 감사인 지정제외 점수를 부과하고 시정권고를 미이행한 경우 등록을 취소합니다.

■ 특히, 통합 품질관리시스템의 구축이 미비하거나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는 감사인에 대해서는 최대 차기년도에 감사인 지정을 받지 못하는 수준까지 지정제외점수를 부과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5월 3일 이후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분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 회계법인의 부실한 품질관리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마련하여 품질관리향상을 통한 회계투명성 제고를 도모하기 위함
- 주요내용
 - 회계법인이 상장회사를 감사하기 위해서는 통합품질관리체계 구축 등 일정 요건(등록요건)을 충족하고 계속해서 유지하여야 함
 - 등록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한 상장사 등록 감사인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및 지정제외점수를 부과하고, 시정권고를 미이행한 경우 등록을 취소함
 - 특히, 통합 품질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이 미비한 회계법인은 감사인 지정제외점수가 대폭 부과될 예정
- 시행일 : 2022년 5월 3일

■ 제2금융권 한도성 여신, 지급보증에 대한 충당금 적립 강화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건전성을 강화하고 리스크 관리를 위해,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 및 지급보증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다만,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도성 여신 미사용액에 대한 신용환산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입니다.

*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 '22년 20% → '23년 40%
(상호금융) '22년 20% → '23년 30% → '24년 40%

■ 개정내용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추진배경 : 제2금융권의 충당금 적립을 강화하여 위험관리를 체계화하고, 금융업권간 충당금 적립에 대한 일관성을 제고
- 주요내용 : 제2금융권(상호저축은행, 여신금융전문업, 상호금융)의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 지급보증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근거를 마련

구 분			한도성 여신 미사용액		지급보증	
			현 행	개 선	현 행	개 선
상호저축은행			대손충당금 X	대손충당금 ○	대손충당금 ○	(좌 동)
여신전문금 용	신용카드	신용판매, 카드대출	대손충당금 ○	(좌 동)	부동산PF 채무보증만 대손충당금 적립	모든 지급보증에 대손충당금 적립
		기타 한도성 여신	대손충당금 X	대손충당금 ○		
	비카드	한도성 여신				
상호금융					해당없음	

- 시행일 : 2022년 7월 1일

■ 오픈뱅킹 이용편의 제고

오픈뱅킹을 이용한 출금이체 前 잔여 한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신설하여 고객 편의성이 제고됩니다.

- ▣ 오픈뱅킹 이용고객이 간편송금, 간편결제 시 사전에 출금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출금 한도조회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신설합니다.

※ 이용고객이 오픈뱅킹을 통해 출금할 수 있는 일간 최대한도는 1천만원(한도 도달 고객의 해당일 추가 출금이체 이용은 자동 중지 처리)

- ▣ 신설되는 기능은 오픈뱅킹 참여기관, 유관기관 협의 및 전산 개발을 거쳐 2022년 10월 중 제공됩니다.

- 추진배경 : 오픈뱅킹 이용자 편익 증진 및 한도 초과에 따른 출금실패 관련 민원 해소를 위한 일간 출금이체 한도 조회 기능 제공
- 주요내용 : 오픈뱅킹 이용고객이 출금 전 일간 출금 한도 초과 여부를 사전에 조회할 수 있는 잔여 출금한도 조회 API를 신설
- 시행일 : 2022년 10월 중

■ 금융분야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개정

금융권이 외부 서버나 플랫폼 등 IT 자원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을 개정합니다.

('22.10월 중 금융분야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금융보안원) 개정 예정)

■ 불명확한 업무 중요도 평가기준을 개정하여, 업무 중요도 평가를 위한 구체적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 중복유사한 클라우드 사업자 안전성 평가(CSP) 항목을 정비*하여 평가절차가 간소화됩니다.

* 평가항목을 141개에서 54개로 축소하고, 비중요 업무의 경우 평가항목을 차등 적용 등

■ 금융회사 등이 클라우드를 이용하려는 경우 사전보고를 사후보고로 전환하여 사업 추진의 적시성이 높아집니다.

● 추진배경 : 금융업무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클라우드 이용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며, 지나치게 엄격한 현행 클라우드 이용 규제를 개선하여 금융혁신을 지원할 필요

● 주요내용

○ 불명확한 업무중요도 평가기준을 개정하여, 업무중요도 평가를 위한 구체적 기준 및 절차를 마련

○ 중복·유사한 클라우드사업자 안전성 평가(CSP) 항목을 정비*하는 등 평가절차를 간소화

* 평가항목을 141개에서 54개로 축소하고, 비중요 업무의 경우 평가항목 차등 적용

○ 금융회사 등이 클라우드를 이용하려는 경우 사전보고를 사후보고로 전환

● 시행일 : 가이드라인 개정 : 2022년 10월 / 제도 시행 : 2023년 1월 1일

■ 데이터(가명정보) 결합 절차 개선

금융분야 데이터를 결합하고자 하는 기업 등은 필요시 데이터의 일부만 샘플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결합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또한, 데이터전문기관은 보유한 데이터를 일정 요건*하에 타 기관의 데이터와 스스로 결합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 결합된 데이터의 가명처리 적정성 등을 타 데이터전문기관이 평가 등

■ 개정내용은 규제심사 등 개정절차를 거쳐 2022년 7월 중 개정 완료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 추진배경 : 금융분야 데이터 결합활용 활성화 등을 위해 데이터 결합활용과 관련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

- 주요내용

- 정보집합물을 이용하기만 하는 기관이 결합된 데이터를 보다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집합물 이용기관이 결합신청 및 결합절차에 참여 허용
- 결합된 정보집합물의 일부만 추출하여 활용하려는 경우, 보다 효율적으로 정보집합물을 결합할 수 있는 절차 도입
- 데이터전문기관이 보유한 정보집합물을 스스로 결합할 수 있는 요건 확대

- 시행일 : 미정(7월 중 개정 완료 추진)

〈고용노동부〉

■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제도 시행

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건설현장 포함)에서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휴게시설의 설치 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휴게시설 설치 시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휴게시설 미설치시 : 1,500만원 이하 과태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기준 미준수시 : 1,000만원 이하 과태료

- 추진배경 : 휴게시설 설치 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재규정(과태료 부과) 도입

- 주요내용

-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부여하되,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건설현장 포함)에 대해서는 휴게시설 설치 및 설치·관리기준 준수 의무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 휴게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 범위에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포함

- 시행일 : 2022년 8월 18일

■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도입

2022년 7월 12일부터 퇴직연금제도(DCIRP)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제도)가 도입됩니다.

다.

- 사전지정운용제도는 가입자의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가입자가 사전에 정해 놓은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 퇴직연금사업자는 고용노동부장관 소속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와 고용노동부 승인을 거쳐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마련하며, 원리금보장상품 혹은 집합투자증권(펀드)으로 구성이 가능합니다.
- 기업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한 사전지정운용방법을 근로자대표 동의를 거쳐(퇴직연금규약 반영) 도입하고, 가입자는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사전지정운용방법 정보를 제공 받아 그 중 하나의 상품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 사전지정운용제도를 통한 퇴직연금의 효율적 운용으로 수익률이 제고되어 근로자의 노후소득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추진배경 :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무관심, 금융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저금리 환경 속에서도 예·적금 등 원리금보장상품으로 86% 이상 운용하여 수익률 저조
- 주요내용 : 근로자(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등 무관심한 경우를 대비해 자동으로 적용되는 운용상품을 미리 정해두는 제도
- 시행일 : 2022년 7월 12일

■ 유통배송기사 등 특고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및 특고 종사자 보조사업장 재해 보상

2022년 7월부터는

- ① 유통배송기사(물류센터에서 점포·음식점 배송 또는 물류센터·점포에서 소비자 배송),
- ② 택배 자·간선기사(택배사업 물류 터미널 간 물품 운송),
- ③ 카캐리어·곡물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전용차량으로 자동차·곡물 등 운반) 3개 분야에 대하여 산재보험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 노무제공 형태가 근로자와 유사하여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 필요성이 높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2008년 보험설계사 등 4개 직종을 시작으로, 현재 총 15개 직종*

79만여 명 특고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골프장장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등(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 그간 산재보험 특고 전속성 요건 때문에 여러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종사자의 경우, 산재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 특고 전속성 요건 폐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산재보험법이 개정되어 2023년 7월 시행 예정이며, 현재 산재보험을 적용받고 있는 특고는 개정법 공포(2022.6.10.) 이후부터 보조사업장 재해에 대해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추진배경 : 산재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강화
- 주요내용
 -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곡물 등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 등 3개 분야의 특고 종사자를 산재보험 적용 범위에 추가(시행 : 2022년 7월 1일)
 - 산재보험 특고 전속성 요건 폐지 개정법 공포(2022.6.10.) 이후부터는 보조사업장 재해에 대해서도 산재보상
- 시행일 : 적용직종 확대(2022년 7월 1일) 개정 산재보험법 부칙 시행(2022년 6월 10일)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대표성 강화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 설치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때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원칙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투표로 선출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참여를 의무화하여 근로자위원의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높였습니다.

■ 개정내용은 법 시행 이후 근로자위원을 새로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방법 법률 상향으로 대표성과 민주성 강화
- 주요내용
 - (근로자위원 선출방법)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관련 내용을 법률에 상향 규정
 - (투표 시 근로자 과반수 참여) 근로자위원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투표로 선출 시 근로자 과반수 참여 의무화
 - (위원선거인 선출) 직접 선출 방식과 동일하게 간접선거 위원선거인 선출 시에도 근로자 과반수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법률 명시

- 시행일 : 2022년 12월 11일

■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실시

플랫폼종사자의 노무제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플랫폼기업의 맞춤형 일터개선 사업을 지원합니다.

- ▣ 플랫폼기업 등이 이동노동자 쉼터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소요비용의 일부(50%, 연간 최대 3억원)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지원대상) 플랫폼기업 및 컨소시엄
- (지원수준) 쉼터 등 소요 비용(임차료, 운영비, 인건비 등)의 최대 50%(연간 3억원 한도)
- (지원요건)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사업수행 능력, 사업내용의 적정성, 사업의 효과성을 심사하여 지원여부 판단

- 시행일 : 2022년 6월

■ 중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 기술지도 의무제도 개편

총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 미만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의 기술지도계약 주체가 2022년 8월 18일부터 건설공사도급인(시공사)에서 발주자**로 변경됩니다. ('21.8.17. 개정, '22.8.1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 예외 : 공사기간 1개월 미만, 육지와 미연결 섬(제주는 제외)

** 건설공사발주자에는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민간발주자 등이 해당됨

- ▣ 우월적 지위를 가진 건설공사도급인이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형식적인 기술지도가 이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주자가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발주자가 기술지도기관에 직접 대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도급인의 무리한 요구 등에 대응할 필요가 없게 됨

- ▣ 계약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K2B)에서 발급된 계약서를 사용하여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내용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개정사항은 오는 8월 18일 이후 체결되는 기술지도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가진 건설공사도급인이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형식적인 기술지도 우려
- 주요내용 :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직접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
- 시행일 : 2022년 8월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 및 도급 공사금액 하한 신설

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과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10억원으로 정하여, 정보통신공사업계의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 다만, 국가 등이 관련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공사 발주자의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 이를 통해,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성장 기반 조성과 생존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추진배경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 '22.7.) 제24조의2제5항 신설 및 최근 정보통신 산업 발전과 환경변화로 인해 대기업인 공사업자의 활동 영역이 소규모 정보통신공사까지 진입하여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임
- 주요내용
 - (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③ 「지방공기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에 해당하는 공사업자로 설정
 - (도급가능한 공사금액 하한 신설) 국가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은 10억원으로 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 시행일 : 2022년 7월 12일

■ 기업부설연구소 신고 시 기업의 행정부담 완화

기업부설연구소를 새로 설치하려는 기업 또는 연구소 운영 중에 연구개발인력 관련 사항을 변경 신고하려는 기업은 앞으로 연구개발인력의 4대 보험가입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기존에는 연구개발인력이 해당 기업의 직원임을 증명하기 위한 4대보험 가입증명서를 기업이 제출하였으나, 관련 법령 개정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4대보험 관리기관으로부터 가입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가입정보 제공 관련 법령 개정(2022년 6월 29일 시행)을 바탕으로 기관 간 자료 제공을 위한 시스템 연계 및 관련 서식 개정을 거쳐 2022년 8월경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추진배경 : 부설 기업부설연구소를 방지하고 기업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기관으로부터 자료제공을 받을 수 있는 근거 신설
- 주요내용
 -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과기정통부가 국민연금공단 등에 자료의 이용 및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신설(법률)
 - 과기정통부가 자료의 이용 및 제공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 및 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대통령령)
 - 기업부설연구소를 신청하려는 기업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목록에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삭제(시행규칙)
- 시행일 : 2022년 6월 29일(법률, 시행령), 2022년 8월 (시행규칙)

■ 우주산업 경쟁력 확보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우주산업이 혁신적인 민간 기업 주도로 재편되는 뉴스페이스 시대에 대비하여, 우주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민간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먼저, 우주산업을 집약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우주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하고, 우주개발 기반시설을 민간이 개방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기업들의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해, 우주개발 사업에 기업들이 이윤 등을 계상할 수 있도록 계약방식을 도입하고, 계약 이행 지체 시 발생하는 지체상금은 시행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

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아울러,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우주기술을 우주신기술로 지정하고, 신기술 적용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우주분야 성과의 기술 이전, 인력 양성 및 창업 촉진을 위한 근거 조항도 마련하였습니다.

● 추진배경 : 우주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민간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개정 추진

● 주요내용

- ① 우주개발 기반시설 확충 및 개방 확대
- ② 계약방식 도입
- ③ 우주신기술 지정 및 기술이전 촉진
- ④ 우주분야 인력양성 및 창업 촉진 등

● 시행일 : 2022년 12월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산업통상자원부〉

■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체계적지속적인 육성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2022년 8월 4일부터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됩니다.

■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공급망 안정화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핵심적인 기술산업을 집중 지원하는 중요한 법적 기반입니다.

■ 투자인력양성기술혁신* 등 전방위적으로 기업 노력을 뒷받침하고 국익과 경제안보 관점에서 핵심기술인력 보호기반**을 강화할 것입니다.

* (투자) 인허가인프라 등 패키지, (인력) 계약학과특성화대학 등, (기술) 특허R&D+특례

** 국가첨단전략기술 수출&A 승인 의무화, 전문인력 지정제도 등 신설

● 추진배경 :美中 패권전쟁을 시작으로 급박하게 전개 중인 주요국 “핵심산업 공급망 전쟁”에 신속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함에 따라 공급망 안정화 등 경제안보 실현 및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체계적지속적인 육성지원 시급

- 주요내용
 - 범국가적 정책 추진을 위해 국무총리 주재 위원회 신설
 - 투자기술혁신인력 등 전방위적으로 기업 성장 뒷받침
 - 첨단산업 성장 활력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규제개선 지원
 - 국익과 경제안보 관점에서 전략기술인력의 보호기반 강화
- 시행일 : 2022년 8월 4일

■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

2022년 7월 5일부터 산업데이터I 등 산업 전반에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법령이 시행됩니다. ('22.1.4. 제정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

▣ 이번 법령 제정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기존 권리보호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은 산업 데이터 활용 및 보호 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

* 지능정보화기본법, 공공데이터법 등 기존 법령은 추상적포괄적 법률이거나 특정 분야지원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규정상 공백이 존재

▣ 또한,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산업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였습니다.

* 산업가치사슬 전반의 혁신, 산업 데이터 생태계 및 인프라 조성 등을 망라하는 산업 맞춤형 법률정책 필요

- 추진배경 : 산업데이터I 등 지능정보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①산업데이터 활용보호 규범, ②지원 제도, ③추진체계 등 규정

- 주요내용
 - 개인정보보호법 등 기존 권리보호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은 산업 데이터 활용보호 원칙을 제시하여 기업 불확실성 해소
 - 선도사업 발굴지원, 계약 가이드라인, 표준화, 플랫폼, 협업 지원센터 등 민간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하는 지원 제도 근거 마련

- 시행일 : 2022년 7월 5일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확대 및 보상수준 강화 등 실시

정부의 직접적 방역조치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등이 「소상공인법」 제12조의2에 따라 보상을 받는 경우, 상향된 보정률(90%→100%) 및 하한액(50만원→100만원)을 적용 받게 됩니다.

■ 아울러, 손실보상 대상이 소기업소상공인에서 연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됩니다.

■ 개정내용은 '22년 1분기분 소상공인 손실보상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 온전한 손실보상 등 긴급구조플랜을 추진하여 소상공인 경영지표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

● 주요내용

○ (개요) 정부의 직접적 방역조치로 '21.7.7. 이후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피해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소상공인법 제12조의2)

○ (대상) ①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② '19년 동월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③ 소기업소상공인 및 중기업(연매출액 30억원 이하)

* ('21.3분기)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21.4분기 추가) 시설 인원제한 조치

○ (기준) 개별업체 손실(영업이익 감소)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산정

- (산식) 월별 일평균 손실액 x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

월별 일평균 손실액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 ('19년 영업이익률 +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월별방역조치이행일수 x 보정률	×	월별방역조치이행일수
		×
		보정률

〈조달청〉

■ 벤처나라 '예비지정' 사업 시범 운영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기업의 상품을 기술품질심사 없이 벤처나라에 등록하도록 하여, 창업벤처기업의 판로를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 현재 벤처나라에 상품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외부전문가들의 기술품질평가에서 70점 이상 획득해야 가능하나, 청년기업(만 39세 이하)과 제조능력을 갖춘 초기 창업벤처기업(3년 이내)은 최소한의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심사없이 신속하게 벤처나라에 상품을 등록하여 홍보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법적무인증 보유 여부, 초기 창업벤처기업의 제조 여부 등

- 해당 상품은 6개월간 벤처나라에서 시범적으로 판매가 가능하며, '예비지정' 이후 벤처나라 상품으로 정식 지정될 경우 최대 5년 간 벤처나라에서 상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 벤처나라 '예비지정' 사업은 2022년 7월부터 개시합니다.

- 추진배경 : 전문가들의 기술품질심사 없이 벤처나라에 상품을 등록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을 신설하여,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기업들의 판로를 신속하게 지원
- 주요내용
 - 청년기업(만 39세 이하)과 제조능력을 갖춘 초기 창업벤처기업(3년 이내)은 최소한의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심사없이 신속하게 벤처나라에 상품을 등록하여 홍보판매
 - 해당 상품은 6개월간 벤처나라에서 시범적으로 판매가 가능하며, '예비지정' 이후 벤처나라 상품으로 정식 지정될 경우 최대 5년 간 벤처나라에서 상품 판매 가능
- 시행일 : 2022년 7월

■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개정

창업벤처기업의 조달시장 진입 요건을 완화하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도출된 현행 기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개정합니다.

- 직접생산확인 제도는 타사제품 납품 등 부당납품 업체를 차단하여 기술력 있는 건전성실한 국내 제조업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2007년 이래로 도입 및 시행되어 왔습니다.

■ 금번 개정내용으로는 ① 창업벤처기업 협업대상 확대, ② 소프트웨어의 직접생산기준 완화, ③시정조치 요구 대상 확대, ④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 적용시점 명확화 등이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영세 중소기업들의 공공시장 진입이 한층 용이해지고, 제조등록 및 직접생산확인 점검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9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 창업벤처기업 협업대상 확대 및 제도 운영 과정에서 도출된 현행 기준의 미비점 등에 대한 보완 및 정비 필요
- 주요내용
 - 창업벤처기업의 협업 대상을 (현행)중소기업에서 (개정)중견기업까지 확대
 - 소프트웨어의 경우 소프트웨어 기술자격을 갖춘 대표자 1인으로도 직접 생산이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 신설
 - 자체기준표와 실제 생산방법이 상이한 경우 시정조치 기회 부여
 -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 적용시점 명확화 등
- 시행일 : 2022년 9월 1일

■ AI기반 발주지원, 'e-제안요청 도움' 시스템 오픈

인공지능을 활용한 공공SW사업 제안요청 발주지원을 위하여 AI기반 발주지원('e-제안요청 도움') 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 「e-제안요청 도움」은 발주기관에 SW사업 제안요청서 자동생성 및 자가진단, 지능형 검색 기능을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

■ 발주기관은 SW사업의 규모와 유형에 적합한 참가자격과 평가항목 등 제안요청서 표준서식을 받아볼 수 있으며,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작성된 제안요청서 법령준수 및 요구사항 오류 등 조달요청 자가진단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발주기관에 AI기반 제안요청서 자가진단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정보화사업 발주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공공기관의 사업발주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e-제안요청 도움'은 2022년 8월부터 서비스 개시합니다.

- 추진배경 : SW사업 제안요청서를 쉽고, 빠르게, 정확히 작성검토를 지원하기 위한 조달청 AI 기반 발주지원 시스템('e-제안요청 도움')을 구축운영하여 ICT발주체계 선진화
- 주요내용
 - 발주기관의 제안요청서 작성 단계에서 '참가자격', '평가항목' 등 공통사항을 Rule기반 제안요청서 자동생성 도구 제공
 - 조달발주 지식베이스 및 유형별 제안요청서 비교진단 모델을 구축하여 AI기반 학습데이터를 통해 제안요청서 자가진단기능 제공
 - 공공정보화사업에 대한 유형별 제안요청서 지능형 검색서비스 제공



7월 1일부터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 5개 직종 노무제공자 및 자영업자 대상 고용보험 적용 확대 시행

- 고용노동부 -

주요 내용

- 벤처·혁신기업에 집중 투자하고 상장을 통해 환금성을 높인 새로운 집합투자기구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을 추진합니다.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펀드자산의 일정비율(예: 60%) 이상을 벤처·혁신기업 등에 투자하고, 환매금지형(폐쇄형)으로 운용하여 기업이 장기적·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 또한, 투자금 회수가 용이하도록 상장을 통해 환금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 이러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을 통해,
 - ❶ 성장하는 기업에게 안정적인 자금조달 경로를 제공하고, 일반투자자에게는 제도권 내 투자수단을 통해 벤처·혁신기업에 분산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 ❷ 풍부한 시중유동성을 모험자본으로 활용하여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 ❸ 전문성 있는 운용주체와 자본시장법상 잘 정비된 규율체계를 통해 건전한 투자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7월 1일부터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 5개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해 고용보험을 추가 적용한다고 밝혔다.

* 정보통신(IT) 소프트웨어 기술자,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관광통역안내사, 골프장 캐디,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 정부는 다양한 고용형태를 보호하기 위하여 '20년 12월 예술인을 시작으로 '21년 7월 노무제공자 12개 직종*, '22년 1월 플랫폼 기반 2개 직종** 등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단계별로 확대해왔다.

*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 강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수출입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

** 퀵서비스기사(배달라이더 포함), 운전기사

- 5월 말 현재 한 번이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는 노무제공자는 누계 1,189,963명(중복제거시 957,059명)이고, 이 중 플랫폼종사자는 누계 335,962명(중복제거시 307,573명)으로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시행 1년 만에 약 119만명(중복제거시 약 96만명)이 가입하는 성과를 이루었으며,

* 상기 통계는 추출 시점에 따라 신고 취소 등으로 수치가 변동 가능한 잠정치임

- 이번에 5개 직종*이 추가되면서 더 많은 노무제공자가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 5개 직종의 총 규모는 약 34만명으로, 소득연령요건에 따라 실제 피보험자는 이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

- 아울러, 그간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이 허용됨에 따라 가정어린이집 원장 등은 폐업 결정 등 사업운영에 있어 자영업자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음에도 가입대상에서 불합리하게 제외되어왔다.

- 이에 7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만을 허용하는 가입요건을 완화하는 규제 개선을 통해 사업자등록 없이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개인이 운영주체로서 비자발적 폐업 가능성이 있어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원천징수 등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 등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에 준하여 부여하는 납세번호

**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가정어린이집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주요 내용>

-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대상은 이번에 추가 적용되는 5개 직종을 포함하여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19개 직종*이며,

- 노무제공계약을 통해 얻은 월 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경우에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 '21.7월 고용보험이 적용된 화물차주와 '22.7월부터 적용되는 화물차주는 노무제공실태 등에 차이가 있어 별개 직종으로 산정

**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 소득·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

- 또한 노무제공자가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120일~27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 * 이직일 전 3개월간 30% 이상 소득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감소로 인하여 이직한 경우에도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
- 아울러,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출산일 전후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출산전후급여를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간 받을 수 있다.
- 한편,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노무를 제공받은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하고, 매월 해당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을 노무를 제공받은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 고용보험료는 노무제공자의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료율(1.6%)을 곱하여 산정하고,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 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는 사업주가 원천공제하여 사업주의 부담분과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해야 하는데,
 -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할 예정이다.
- * (대상)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월 보수액 230만원 미만 노무제공자와 그 사업주

<집중신고기간 운영 및 현장 홍보>

-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5개 직종의 고용보험 시행 초기, 제도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보험사무 수행을 위한 사전 준비 등 현장의 제도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6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 * 해당 기간 중 피보험자격 신고 지연 등으로 인한 고용보험법상 관련 과태료 부과 면제
- 또한 사업주 대상으로 고용보험 시행 관련 맞춤형 교육 및 안내 등을 지속해서 실시하고, 온·오프라인 홍보도 병행하여 종사자들과 일반 국민에게도 적극적으로 제도를 알릴 예정이다.
- 이와 함께 7월1일부터 적용 대상이 된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관련 협회, 분야별 커뮤니티 등을 통한 대상별 목표화 홍보를 시행할 계획이다.

<향후 계획>

- 앞으로는 직종별 확대 방식이 아닌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노무제공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고용보험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 * 수많은 직종을 일일이 실태 파악을 통해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직종별 확대 방식 지속시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로의 전환이 지연될 우려
-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임금근로자 및 소득파악이 가능한 노무제공자 대상으로 소득기반 고

용보험 적용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24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23년에는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 한편, 자영업자 고용보험과 관련하여서는 '21년 9월부터 '22년 3월까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자영업자 연구회를 운영했고,
 - 이를 발전시켜 6월 28일 전문가, 관계부처 등으로 구성된 「소득기반 고용보험 확대 연구회*」를 구성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에 대한 세부 논의를 시작했다.
 - * 고용부(고용서비스정책관 좌장), 관계부처(기재부, 중기부, 국세청), 전문가로 구성
 - 연구회에서는 전문가 중심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 확대를 위한 세부과제 및 쟁점을 구체화하여 연말까지 복수의 세부 적용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부터 사회적 논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 이정식 장관은 "이번 고용보험 확대 적용과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를 통해 일하는 모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고용안전망 구축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다"라면서,
 - "확대된 고용보험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한편, 앞으로는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많은 종사자분이 보다 빠른 시일 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편,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각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나 전화상담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으며,
 - 자영업자 고용보험 관련 세부 사항은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나 전화상담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부가세영세율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 재정환율

통 화 명	6월 2일(목)	6월 3일(금)	6월 7일(화)	6월 8일(수)	6월 9일(목)
미 달 러 (USD)	1238.40	1251.20	1241.10	1257.10	1255.40
위 안 화 (CNH)	185.30	186.69	187.04	188.40	188.10
일 본 엔 (JPY)	951.41	963.31	940.19	947.00	934.18
유 로 화 (EUR)	1319.14	1345.04	1327.05	1345.79	1345.66
영 국 파 운 드 (GBP)	1546.14	1573.82	1554.54	1583.44	1574.33
캐 나 다 달 러 (CAD)	978.16	995.23	986.57	1003.19	1000.12
홍 콩 달 러 (HKD)	157.80	159.49	158.21	160.22	159.97

통 화 명	6월 10일(금)	6월 13일(월)	6월 14일(화)	6월 15일(수)	6월 16일(목)
미 달 러 (USD)	1257.60	1266.00	1286.00	1289.70	1291.30
위 안 화 (CNH)	188.02	189.00	190.60	190.96	191.98
일 본 엔 (JPY)	935.40	939.97	957.88	953.22	963.12
유 로 화 (EUR)	1335.07	1330.25	1339.05	1345.22	1348.89
영 국 파 운 드 (GBP)	1570.49	1556.61	1560.69	1548.80	1570.35
캐 나 다 달 러 (CAD)	989.96	989.53	997.75	995.45	1001.47
홍 콩 달 러 (HKD)	160.23	161.28	163.82	164.29	164.51

통 화 명	6월 17일(금)	6월 20일(월)	6월 21일(화)	6월 22일(수)	6월 23일(목)
미 달 러 (USD)	1284.10	1287.50	1291.70	1290.60	1295.70
위 안 화 (CNH)	191.62	192.12	193.18	193.11	192.99
일 본 엔 (JPY)	968.73	952.40	955.93	945.63	951.78
유 로 화 (EUR)	1354.60	1350.59	1358.55	1359.45	1369.23
영 국 파 운 드 (GBP)	1585.41	1573.20	1582.85	1584.15	1588.53
캐 나 다 달 러 (CAD)	991.66	989.51	995.07	998.53	1000.42
홍 콩 달 러 (HKD)	163.59	164.02	164.55	164.41	165.06

통 화 명	6월 24일(금)	6월 27일(월)	6월 28일(화)	6월 29일(수)	6월 30일(목)
미 달 러 (USD)	1300.70	1299.40	1285.60	1284.90	1292.90
위 안 화 (CNH)	193.77	193.97	192.07	191.92	192.75
일 본 엔 (JPY)	964.66	961.27	949.87	944.26	946.45
유 로 화 (EUR)	1369.25	1373.86	1360.04	1352.49	1350.05
영 국 파 운 드 (GBP)	1595.63	1597.48	1577.11	1565.97	1567.32
캐 나 다 달 러 (CAD)	1001.77	1008.15	999.07	998.17	1003.03
홍 콩 달 러 (HKD)	165.71	165.54	163.83	163.76	164.77

※ 상기의 기준·재정환율은 금융결제원의 자회사인 (주)서울외국환중개에서 고시한 내용으로 외화외상매출의 회계반영, 결산평가와 부가세영세율 과세표준계산시 적용됩니다.

※ (주)서울외국환중개 홈페이지(<http://www.smbis.biz>, 전화 : 3705-5500)에서 당일의 기준환율을 보실 수 있습니다.